

실무지역량강화 프로젝트

『주거복지학교』



|| 일시 : 2011년 2월 17일(목) 10:00~17:00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 주최 :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주거복지센터

||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차 례 >

1. 또 하나의 재가복지 상상하기 “주거복지” 2탄 / 홍인옥 3
2. 상식으로 알아야할 기초생활보장제도 / 김희성 35
3. 사회복지 거꾸로 보기 / 이희범 53
4. 부록
 - ① 또 하나의 재가복지 상상하기 “주거복지” 1탄
 - ② 양천주거복지센터 사업 소개
 - ③ 함께하는 사람들



실무지역량강화 프로젝트 『주거복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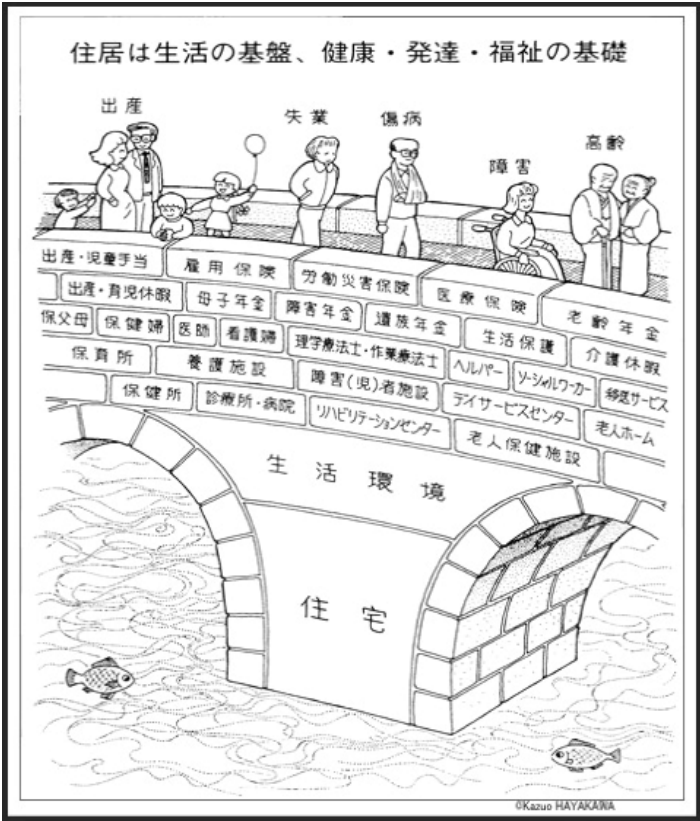
또 하나의 재가복지 상상하기 “주거복지” 2탄

홍 인 옥

(도시사회 연구소 소장)

지역사회복지관과 주거지원사업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1. 사회복지와 주거지원사업

- 사람의 일생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다리를 건너는 것
주거는 그 다리를 떠받치는 중요한 교각(早川和男, 1997)
- 사회복지의 기본인 가정을 담는 그릇으로서 주택(거)
 - 가정생활의 토대이자 삶의 질의 기반
 - 사회복지의 기본단위
- 주택 자체는 물리적 공간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가정이 담겨 있고
가정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에 따라 주거를 복지의 기초로 파악

1. 사회복지와 주거지원사업

- 주택과 가정복지(family well-being)의 연계
 1. 주택의 물리적 속성
 - 시설, 구조, 실내환경 등으로 구분
 2.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 주택의 규모와 주거비 문제
 3. 근린주거환경의 측면
 - 지역의 주거수준, 안전문제, 교육환경 등

1. 사회복지와 주거지원사업

사례1

일정한 거처 없이 노숙과 쪽방을 오가며 대안 없는 생활을 하던 노숙인 K씨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누구의 참견도 받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기면서 생활이 안정되었고 또 여유가 생겼으며, 이전과는 달리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갖게 되었다.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이 노숙인 K씨가 사회에 복귀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K씨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모금회의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을 지원받았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노숙인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 K씨를 비롯한 노숙인이 길거리 노숙생활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 사회복지와 주거지원사업

사례2

중학교 2학년인 K군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인 누나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단칸방에서 월세 10만원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용잡부로 일하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일이 없어 노는 날이 많아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서 받는 10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IMF 이전에 부모님은 야채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았고, 야채 차량노점을 하셨는데 그것마저 힘들어서 그만두셨다. 이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3평 남짓한 지하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K군은 물론 부모님도 자신들의 처지를 숨기고 싶어 하였으며, 때문에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으로 학교에 상주하는 지역전문가선생님을 통해 K군의 사정을 알게 된 지역단체가 전세자금 용자지원제도를 소개·알선하여 현재는 방 2개의 다가구주택 1층으로 입주하면서 생활은 물론 가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2. 사회복지관의 성격과 역할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회사업법 제2조 제3의2호)
- 사회복지관의 목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보호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3조)
-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심기관

2.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 ① 지역성의 원칙 :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 ② 전문성의 원칙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 시행
- ③ 책임성의 원칙 :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
- ④ 자율성의 원칙 :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적 운영
- ⑤ 통합성의 원칙 :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통한 효과적 효율적 운영
- ⑥ 자원활용의 원칙 : 다양한 복지자원의 적극적 활용
- ⑦ 중립성의 원칙 : 정치, 영리, 종교적 중립
- ⑧ 투명성의 원칙 : 투명한 운영

2.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 치료 - 부양가족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밀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운영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워크 구축 - 주민복지 증진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 조직	-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 복지네트워크 구축
교육, 문화 사업	- 아동, 청소년 기능교육 - 성인 기능교실, - 노인 여가문화 - 문화복지	- 노인 여가, 문화 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자활사업	- 직업기능 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 개발 - 자활공동체 육성	- 취업, 부업 안내 및 알선 - 취업, 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2. 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 및 서비스
아동복지	학습과 취미활동, 생활지도, 놀이치료, 어린이집, 방과후 학습교실 운영 등
청소년 복지	학교사회사업, 사회봉사프로그램, 다양한 클럽운영 및 공동행사 등
가정복지	심리상담, 가정폭력 상담, 밀반찬 서비스, 도시락 배달서비스 등
노인복지	주야간 탁노소, 노인 취미교양 프로그램, 노인대학, 무료 중식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	의료재활서비스,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장애인청소년 사랑방, 작업치료, 그룹지도, 정신장애인 재활훈련, 정신장애인 주간보호소 등
보건복지	무료진료, 물리치료, 병원동행 및 차량지원, 알콜중독집단 치료 등
자활지원	청소, 도배, 용역사업, 여성가장 재취업 프로그램, 취업알선, 기능훈련 등
지역주민 조직	공동체 조직화, 동네축제, 경로잔치 등을 지역기관, 부녀회 등과 공동주진, 주민교육사업, 자원봉사자 육성 등

3. 지역사회복지관과 주거복지사업

■ 주거복지사업 주체로서 사회복지관의 강점

- 확고한 지역사회 기반
- 주민들의 신뢰
- 다양한 복지자원 및 프로그램 확보
-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 용이한 자원연계
-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

3. 지역사회복지관과 주거복지사업 : 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센터사업

- 주거복지센터는 민간주거복지기관으로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역 내 종합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
- 센터 주거지원사업은 크게 직접지원사업과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사업으로 구분
- 현재 주거복지센터(실무자)는 제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두루 파악하고 있고, 그 동안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거복지사업 노하우를 축적



3. 주거복지센터 사업현황

○ 주거복지센터의 지원활동은 크게 직접지원사업과 기존 주거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사업으로 구분됨.

직접지원사업

구분		구 분
주거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자원 확인 및 접근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자료 축적 및 활용 • 방문상담 및 현장상담 등 다양한 방법.
긴급 임대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거위기 및 저소득층 상설 가구 지원 • 2, 3차년도부터 체계적인 접근 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예산에 의한 집수리사업 • 공공부문 확대 및 자원다양화로 인해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를 통해 민간주거복지체계 구축
기타	긴급 주거비 소액대출 지원사업	• 대구 서구센터 자체사업이며 일시 대출지원방식
	긴급 연료지원사업	• 기존 에너지재단 사업의 한계를 참조하여 2008년부터 연료가 없는 가구에 현물 지원
	특별 취약계층지원사업	• 특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특정 욕구 지원 서비스

3. 주거복지센터 사업현황

현행 주거복지프로그램

○ 센터 주요 활동 중의 하나로서 기존 주거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지원 서비스

구분	구 분
공공임대주택 제공사업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매입임대주택
	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전세임대주택
	서울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주거비 지원사업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융자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지원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지원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월임대료 보조
주택개량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지원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3. 주거복지센터 사업현황

센터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

- 기존 주거복지프로그램 연계보다 직접지원사업 선정
- 4개 센터가 임대료지원사업 선정

구분	센터 대표 프로그램	근거
강북	• 쪽방비닐하우스 임대주택사업	• 운영기관 선정 후 실질적이고 활발한 홍보와 상담이 이루어짐
대구	• 긴급주거비 지원사업 • 소액대출지원사업	• 실적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 • 주는 복지에서 자립할 수 있는 복지 실천모델
성동	• 임대료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성북	• 임대료지원 및 사례관리	
양천	• 임대료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원주	• 임대료지원, 생계비 지원	• 전달체계가 가장 간소하고 지원효과가 높음
인천	• 주거비지원사업	• 지역여건 상 수요가 증가하고 대책이 시급
전주	• 주거환경개선사업	• 실적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의 경험이 많음

3. 주거복지센터 사업현황

수혜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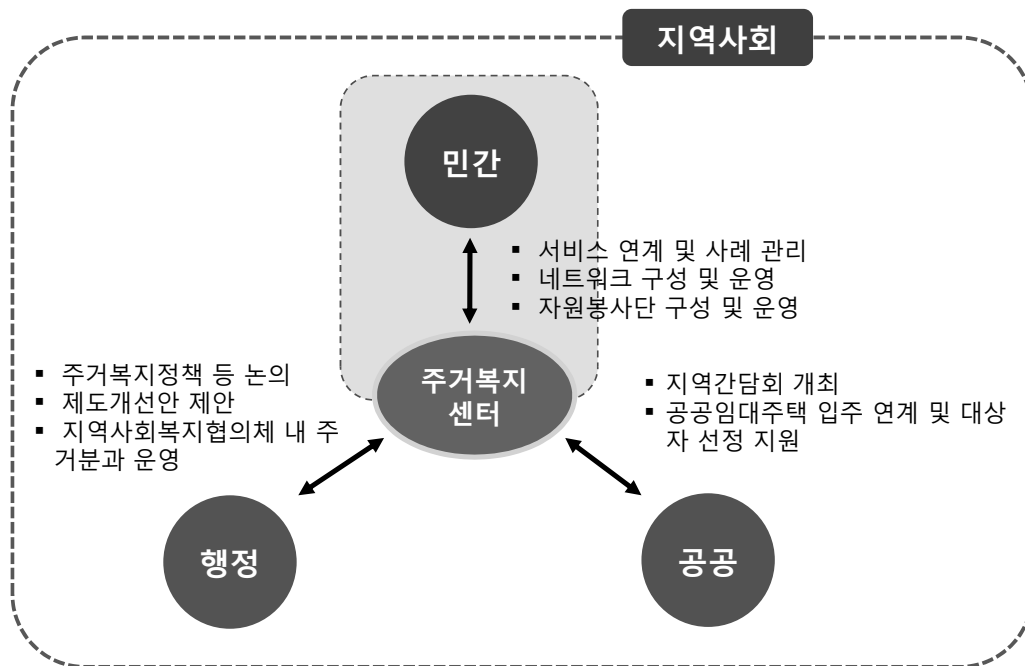
- 센터 직접지원사업과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지적

구분	프로그램	근거
강북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임대주택 입주확정 가구, 현 주택에서 나온 주택으로 이주희망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이동이 가능토록 함
대구	•주거비지원사업 •주택개량지원사업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직접사업으로서 신속성 •실무자가 직접 확인 •주거취약세대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
성동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연계	•본인에게 적합한 임대주택 정보제공 및 연계로 주거불안 해소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대안을 마련
성북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많아 선정 가능성이 높고, 입주 시 보증금 및 임대료부담이 낮아 효과적임
양천	•집수리서비스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
원주	•긴급 임대료지원사업	•약간의 도움으로 빈곤선 이하로의 추락방지
인천	•직접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 긴급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직접지원사업으로 필요성과 효과성 모두 높은 사업
전주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전세, 매입, 국민, 영구임대주택 순으로)	•주거안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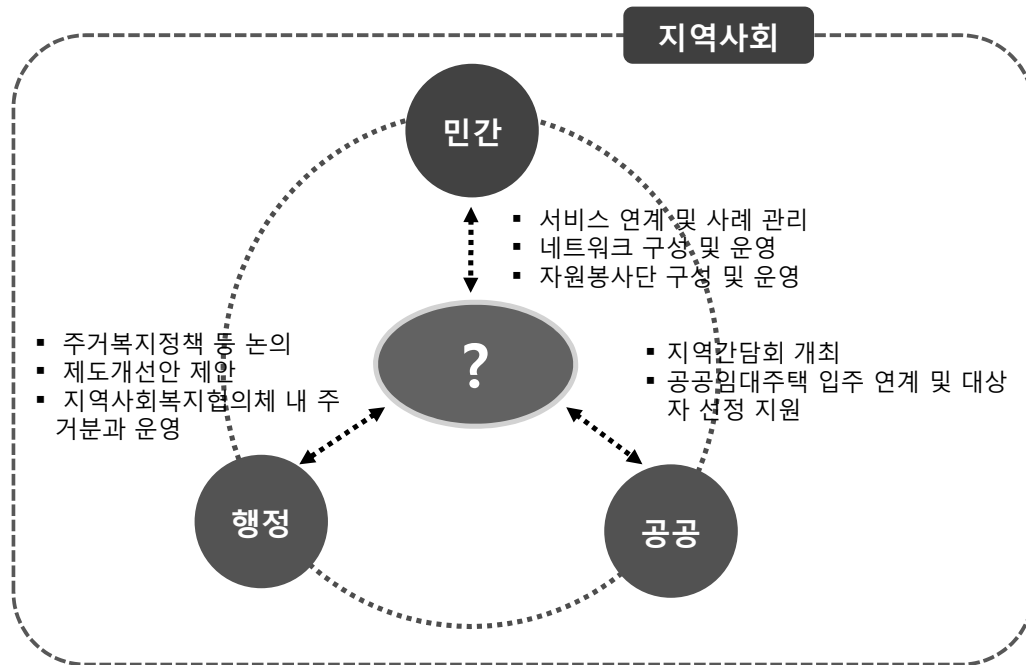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현황

구분	민민 협력	민관 협력	민공 협력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및 주민조직 복지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단) 민간기업 및 민간재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광역시자체 에너지재단 보호관찰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공단 등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대상 추천 및 연결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집수리 네트워크 구성 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지간담회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주거분과 구성 주거복지포럼, 해피하우스 센터 지원 등 통장단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담회 개최 एको홈닥터 양성 교육 실시 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참여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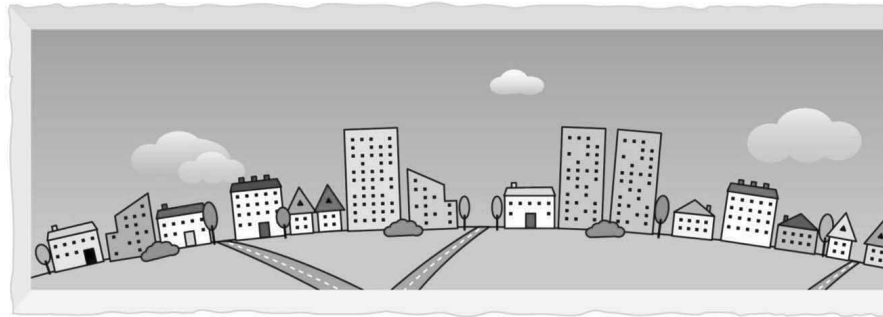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4. 주거복지사업 주체로서 사회복지관의 과제

- 전문성 확보
- 정보와 자원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성
- 일상사업의 지속성 확보

우리나라 주요 주거복지사업 현황



주거복지정책 수단

1. 공공 소유 장기임대주택 공급
2. 주택구입 자금이나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한 일반주택시장에서의 구매력 지원, 즉 주택수요지원제도
3. 집수리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 임대주택과 임대료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두 개의 핵심 축.

⇒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재고 확보 후 임대료보조제도 강화(미국 예외)

주거복지 프로그램 현황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서울시 다가구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도시재정비임대주택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쪽방/비닐하우스 주민 주거지원사업

=> 보금자리주택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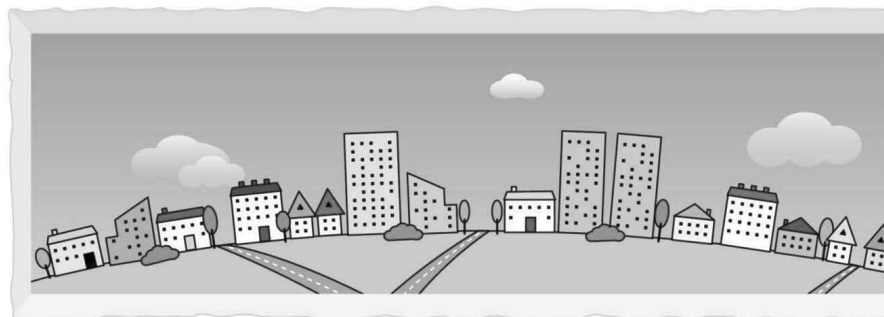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주택 구입자금지원
매입임대 주택자금 지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지원사업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지원
주택재개발 조합원 전세자금 지원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

주택개량 지원 프로그램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 대출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사업
주거현물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민간단체 주택개량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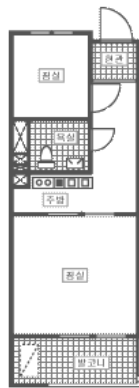
- ▶ 영구임대주택
- ▶ 국민임대주택
- ▶ 재개발임대주택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사업
- ▶ 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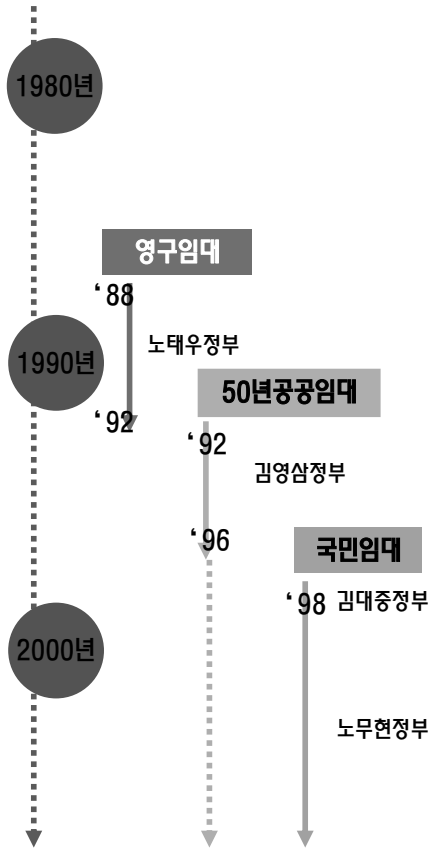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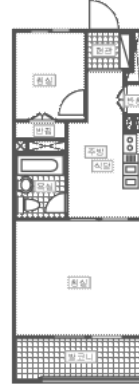
영구임대주택이란?

- 영구임대주택은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총 19만호를 공급한 분양전환되지 않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약 7.4만호, 비수도권이 약 11.6만호임. 관리주체별로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고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곳이 14만호,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해서 관리하는 곳이 5만호임
- 영구임대주택은 1992년 이후 공급이 중단. 보금자리 주택공급계획으로 부활. 10만호 공급계획중

12평형



14평형



영구임대주택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입주 자격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
- ②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③ 일군위안부
- ④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⑧ ①~④에 준하는 자로서 시도지사 및 건설교통부 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예-철거민)
- ⑨ 청약저축가입자

선정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 기간

-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거주 가능
- 관리사무소에서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안내문과 인상분 고지서를 세대별로 배부

임대료

- 서울시 SH공사의 경우 1999년부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 전환을 허용했으며 전세전환까지 가능
-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기본 월 임대료의 50%를 상한선으로 임대보증금의 증액전환만 허용

■ 주택관리공단(2004년 기준)(단위: 원)

구분	수급자세대		자격상실 이후 최초 계약		자격상실 이후 두 번째 재계약		자격상실 이후 세 번째 재계약 / 청약저축가구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최소	1,593,000	28,370	1,595,000	37,800	2,080,000	44,590	2,176,000	48,510
최대	3,002,000	61,670	5,073,000	81,730	9,358,000	90,620	10,512,000	119,110
평균	2,009,792	40,408	3,164,893	54,989	4,017,643	62,966	5,123,574	74,169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에서 공급되며 30년 동안 분양전환되지 않음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호 공급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고, 현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포함 공급



36㎡
A형



46㎡
A형



59㎡
A형

국민임대주택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일반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규모별로 다름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 임대주택만 신청 가능(단, 이혼녀와 자녀,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자매인 경우 예외)
- 3순위는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하며 3순위까지 미달할 경우 선착순 공급

구분	전용 50㎡ 이하	전용 50~60㎡ 이하	전용 60㎡ 초과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주,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006년 기준 2,410,370원) 이하(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636,380원 이하) - 단, 50㎡ 미만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006년 기준 1,721,690원)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단, 4인 이상 세대는 1,883,130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2006 년 기 준 3,443,399원) 이하인 자
선정 순위	- 1순위: 당해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연결하는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지역거주자 - 3순위: 1·2순위 이외	-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1·2순위 이외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이란?

- 재개발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에서 이주가 불가피한 철거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되지 않음
- 신규 공급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를 당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가가 발생하면 새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입주가 가능
- 2005년 5월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임대주택 건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면서 전체 주택 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명시. 이를 계기로 재개발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공급량이 거의 없음. 여기에서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함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신규 건설시

- 1순위: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2순위: 당해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 3순위: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지구의 세입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 4순위: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주 기간

- 임대기간은 2년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데, 신규 건설시 입주한 경우에는 50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이후 공가가 발생하여 입주한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료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건설비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지역 및 건축년도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50년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함
- 임대보증금은 700~2,500만원, 월 임대료는 85,000~265,000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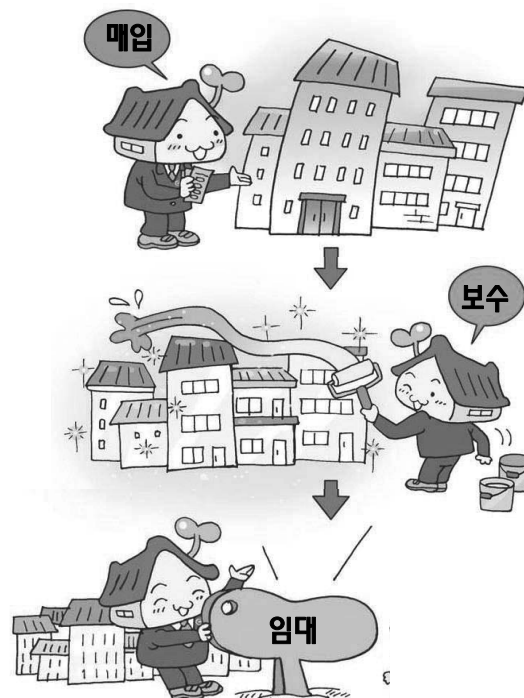
임대료 상호전환

- 희망자에 한하여 기본 임대보증금에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월 임대료를 전부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월 임대료를 초과하여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는 없음
- SH공사는 2007년 현재 계약시 또는 입주기간 중 전환 이율을 연 9.5%로 적용하고 있으며, 수시(매월 말일)로 전환 가능. 적용금리는 변동 가능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2004년 시범사업으로 503호를 공급하였고, 2005년 4,112호, 2006년 6,059호를 공급하였으며, 현재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추진하고 있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입주 자격

-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서 일정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주요 입주대상은 2인 이상 가구로 하되,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1인 가구도 일부 입주대상에 포함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 차상위계층 여부는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확인 가능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2순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따라서 입주자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 동안 거주 가능**
- 6년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므로, 입주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주거이동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할 것임**

임대료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한 가격에 의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정해지는데, **시중 전세가격의 30~35% 수준임**. 지하방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갖는 **시장중 임대보증금의 2/3 수준으로 결정**
- 임대보증금은 평균적으로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할 때 사용한 **사업비의 5% 정도**
-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35%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에 동사무소, 구청 또는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에서 열람 가능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서울의 경우 1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보증금은 250~380만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는 8~10만원 정도**.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다세대·다가구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본인인 사용하는 전기세, 상·하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 이외의 별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가 본인의 소득수준과 생활패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자치구 내라면 어떤 장소도 가능함. 전세금도 지역별 한도액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
- 2005년 500호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년 5,589호를 공급. 2007년 이후 지속사업으로 추진중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입주 자격

-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서 일정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주요 입주대상은 2인 이상 가구로 하되,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1인 가구도 일부 입주대상에 포함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 차상위계층 여부는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확인 가능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2순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 기간

-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거주 가능
- 관리사무소에서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안내문과 인상분 고지서를 세대별로 배부

전세금 및 주택규모 한도

-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주택 중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는 **최대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천만원** -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7천만원으로 중액 되었음
- 단,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대한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호당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초과주택도 가능

▶ 전세금 한도액 및 주택규모 한도 알아보기

- ①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A씨는 전세금이 8,000만원인 전용면적 21평짜리 빌라에 입주하길 원하고 있다.
→ 서울시의 경우 전세금 한도액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인 1,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입주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없다면 좀 더 저렴한 주택으로 다시 알아봐야 한다.
- ②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B씨는 전세금이 4,000만원인 전용면적 28평짜리 단독주택에 입주하길 원하고 있다.
→ 지역과 상관없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다.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이란?

- 노숙인,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취약계층은 안정적 주거의 부재로 기존의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되고 있으므로 노숙인 쉼터·노숙인 상담보호센터·쪽방 상담소 등의 유관기관을 이용하였거나, 기존의 노숙인 보호·지원·전달체계에서 자율훈련을 받은 단신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도심 내에서 현재의 수입과 직업활동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간단계의 사업
- 정부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주택을 물색한 후 매입하여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 자활의지가 높고, 객관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같이 입주할 필요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을 포함)
 - 노숙인, 쪽방거주 단신자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 자활의지 및 자활여건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05년도 노숙인 보호사업안내」에 의한 자활의집 사업의 입주대상자 기준 및 요건을 준용하여 판단

쪽방 ·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사업배경 및 추진과정

- 2007년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회의에서 <쪽방 ·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이 확정되었음. 이후, 주거실태조사(건교부), 매입임대주택 임주의사여부 조사(복지부) 진행
- 2007년 9월 건교부에서 <쪽방 ·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고,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10월 초 종로구 쪽방지역에 거주하는 4가구에 대해 시범입주 실시함.
- 임주의사 여부 조사에서 이주하길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공급신청안내서를 발송하여 현재 일부 주민은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음

향후 공급계획

매입 임대

년 도	합 계	매입	원룸신축	레고형
합 계	3,600	1,600	1,700	300
'07년	600	500	-	100
'08년	1,100	500	500	100
'09년	1,900	600	1,200	100

전세 임대

년 도	전세임대
계	836
'07년	280
'08년	225
'09년	224
'10년이후	107

쪽방 ·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주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중 쪽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 토지 또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하고 있는 자(세대원을 포함)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및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외(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경우 가능)

매입 임대 사업

일반가구용

- 입주대상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에 임대하는 주택

1인가구용

- 입주대상자가 1인인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 중 입주대상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주택

공급 유형

단신계층용

- 입주대상자가 1인인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 중 "임대 및 입주자관리 업무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에 공급하여 운영기관에서 입주자 선정 및 임대관리하는 주택

공동생활용

- 동일한 주택에 다수인(4~6명)이 입주하고 "운영기관"에서 입주자 선정 및 임대관리하는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지원가능 주택

-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인 주택
- 압류나 가압류 등 소유권에 이상이 없는 주택
- 채권확보가 가능한 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쪽방 ·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주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즉, 임주자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최장 6년 동안 거주 가능
- 6년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므로, 임주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주거이동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할 것임.
- 일반가구용 임대주택, 1인 가구용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됨. 운영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단신계층용 임대주택과 공동생활용 임대주택은 재계약 횟수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
- 대한주택공사와 운영기관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운영기관과 임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임주자 선정 및 임주기간 등은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임대료

- <쪽방 ·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2007.9.11)에서는 시중 임대료의 50%의 범위 내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정부자금지원 규모, 직업, 소득수준, 월임대료 부담가능성 및 가구 매입임대주택 임주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시중임료 평가액(시중전세가격으로 환산)의 30%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산정

보금자리주택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2008. 9.19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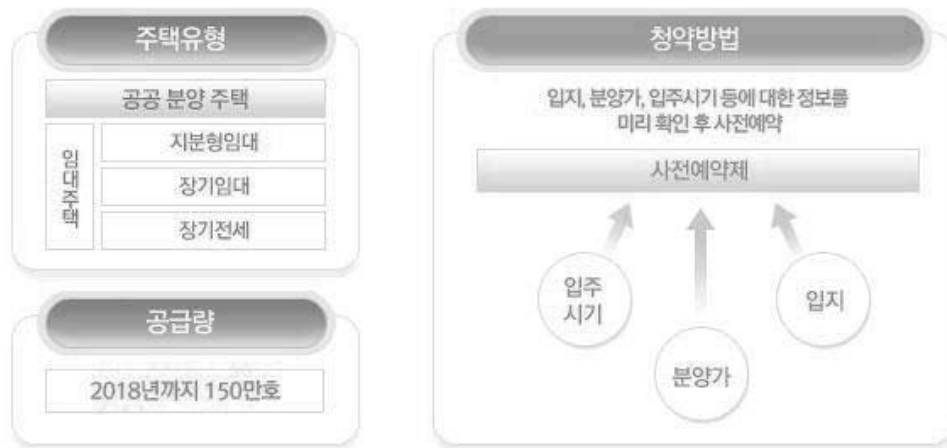
보금자리 주택

자료출처 : <http://www.bogeumjari.kr>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의 실현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자료출처 : <http://www.bogeumjari.kr>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공공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 주택 정책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자료출처 : <http://www.bogeumjari.kr>

공급계획 - 물량

소득계층별 / 수요별 맞춤형 주택 공급

수도권과 지방에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자료출처 : <http://www.bogeumjari.kr>

공급계획 - 입지

주택건설 지역별 차별화된 택지확보 계획

도시내, 도시근교, 도시외곽의 도시인근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도심 수요를 충전하고, 개발비용을 적정화하며, Eco-City를 건설합니다.



신청자격

소득수준 / 맞춤형 입주 조건

정부는 국민 모두가 부담가능한 주택 (Affordable House)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지원 프로그램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지원사업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지원
- 주택재개발 조합원 전세자금 지원
-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란?

-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침>에 의거하여 1990년부터 영세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음. 현재는 건설교통부의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세부지원 기준>에 따라 시행됨
-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대출 실적을 살펴보면, 연 평균 약 2만 5천가구가 대출을 받았으며 가구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1,600만원임

※ 주의사항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최종 결정기관인 취급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한 다음, 대출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란?

-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대출 실적을 살펴보면, 연 평균 약 3만 9천 가구가 대출을 받았으며 가구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1,800만원임

대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서민
- ① 무주택세대주이고, 최근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인 자
-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자

▶연간급여(소득) 판정

연간급여(소득) 산정 시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내역서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상여금 및 실비 변상적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신청자격을 갖게 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이란?

- 정부가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
- 2004년 7월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전략’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등에게 매년 1,000호씩 2012년까지 공급할 계획. 그동안의 지원실적을 보면 2005년 1,513호, 2006년 1036호, 총 2,549호를 공급

주거급여

현황

최저주거비 보조 방식

- 원칙적으로는 대상자의 주거유형에 따라 주거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했지만,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인프라 부족으로 가구규모에 따라 동일금액을 일괄지급하고 있음
-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보충급여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와 생계급여와 분리된 주거급여로 이원화 되어있음
-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2006년을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33,000원에서 55,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됨
- 최저생계급여에 포함된 최저주거비는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의 중소도시 아파트 전세가 격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구규모에 따른 최저주거비는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대출 지원
 주거현물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구분	도입 연도	사업주체	지원 형태	지원조건
농어촌 주택개량지원	1976년	농림수산식품부	자금지원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지원	1989년	국토해양부	자금지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현물급여	2002년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자가소유 수급권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2006년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농어촌 거주 장애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2007년	지식경제부	서비스지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2009년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비스지원	슬레이트지붕의 자가소유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2010년	국토해양부	서비스지원	자가소유 수급권자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 대출지원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 지원 프로그램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건축 및 개량을 지원을 하는 제도
- 지원기준은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4,000만원, 다세대주택은 호당 2,000만원, 그리고 다가구단독주택은 가구당 1,500만원을 지원. 단 개보수의 경우 용자한도액의 50%만 적용함
 - 용자조건은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임
-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원신청이 많지 않아 계획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지원 사업

- 1976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한 사업으로,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고,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중 주택개량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용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기준은
 -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며, 동지역은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대상주택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 지원규모는 세대당 4,000만원이며, 증개축은 용자한도액의 50%만 적용함
 - 용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임
- 1976년부터 2005년까지 386,203동의 농어촌주택 개량지원

MEMO



복지관 페이스북
www.facebook.com/sinwc0414

MEMO



복지관 트위터

www.twitter.com/sinwc0414

실무자역량강화 프로젝트 『주거복지학교』

상식으로 알아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

김 희 성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 교육실장)

2012년 알기쉬운 복지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수급권은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수급권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다음과 같다.

(1)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20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현금급여 기준	2011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2012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2) 재산기준

1)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2) 금융재산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을 공제한다. 일반가구의 비상금과 같다.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300만원	300만원

(3) 재산 기준 특례자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는 가구보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높다.
(인정금액은 지역별 8,500만원~6,000만원이다)

(4)부양 의무

부양의무라고 하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초생활 보장제도 에서의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식간에 동일하다. 결혼한 자식이 어렵 게 살면 부모도 자식을 부양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는 1촌간에만 하 도록 되어있고 2촌(형제, 자매) 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가구로 보나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다.

1)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간에만 부양의무가있다. 2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2)부양비 부과율

결혼한 아들과 미혼자녀는 30%이고 결혼한 딸은 15%이다.

3)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 수급권자 최저생계비의 130%.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수급자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부양의무자	719,360	1,224,856	1,584,534	1,942,215	2,303,895

4)부채 공제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집 살 때 빌린 융자금은 공제한다.

부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5)교육비 공제

부양의무자 가구의 교육비는 공제한다.

어린이집, 유치원비, 등은 공제대상이나 일반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 니다.

6)의료비 공제

부양의무자 가구의 의료비도 공제한다. 3개월간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내역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7)압류금액 공제

부양의무자의 급여에서 압류되는 금액은 공제한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8)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산 조회나 본인에게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전산 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소득을 마음대로 잡아서 안된다.

9)딸은 금융재산과 소득만 조사

딸네의 집이나 자동차는 재산으로 안보고 금융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친정 부모를 완전 부양해야 한다.

-딸네가 10억짜리 집에 살아도 집이 두채여도 소득만을 본다.

10)이혼한 부모의 부양의무

이혼을 하여 친권이나 양육권이 부, 모 어느 쪽에 있더라도 수급자격과는 관계없다. 수급자격은 현재 누구와 함께 가구를 이루고 있는가를 본다.

11)부양의무자 부양범위 확대

2012년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등 근로무능력자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85%로 높아져 61,000명의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부양의무자의 부양범위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사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72	1억 4414	122	1억 4806	158	1억 5084	194	1억 5363
	미약	72~143 (204)		122~194 (276)		158~230 (327)		194~266 (379)	
	있음	143 (204)		194 (276)		230 (327)		266 (379)	
2인	없음	72	1억 4806	122	1억 5197	158	1억 5476	194	1억 5755
	미약	72~194 (276)		122~249 (348)		158~280 (399)		194~316 (450)	
	있음	194 (276)		249 (348)		280 (399)		316 (450)	

*괄호안은 부양의무가 185%인 경우

2. 알기쉬운 기초생활보장제도

번호	내 용
1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
2	소득인정액 산정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3	수급신청하면 신청한달을 기준으로 수급 받는다.
4	부모나 친척 친구로부터 도움받는 돈은 전부 소득으로 본다.
5	대학생이 휴학하면 근로능력자이다.
6	외국에 3개월이상 나가있으면 생계비를 받을 수 없다.
7	대학을 졸업한 수급자 자녀가 취업하여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면 탈락된다
8	수급자가 갚는 부채의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한다.
9	수급자 자녀가 일반고등학교가 아닌 학교에 다녀도 수업료를 지원 받는다.
10	가출신고 했는데 잘 있다는 전화가 오면 가출이 아니다
11	수급자는 외국에 갈 수 없다.
12	수급자가 매달넣는 보험금은 소득에서 공제해주지않는다.
13	수급자가 받는 이자는 소득으로 산정 한다.
14	대도시에 사는 수급자의 기본 재산기준은 5,400만원이다.
15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넘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16	수급자가 신용회복으로 갚는빚은 소득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다.
17	30세 이하의 미혼 자녀와 부모는 따로 살아도 한가구로 본다.
18	공익근무중인 사람은 수급자격이 있다.
19	만기적금과 퇴직금은 금융재산으로 본다.
20	수급자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으로 연간 450만원이 지원된다.
21	대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소득으로 산정 하지 않는다.
22	장애5급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다
23	알콜중독자의 아내는 간병인으로 근로무능력자로 본다.
24	임신하면 일하지 않아도 수급가능하다.
25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며느리는 근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본다.
26	잘살지 못하는 결혼한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 친정부모의 부양의무가 없다.
27	친정어머니도 출가한 딸을 부양해야 된다.
28	옆동네에사는 형제자매는 부양의무가 없다.

29	외국에 있는 자녀가 부양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30	부양의무자가구의 대학생등록금은 소득에서 공제한다.
31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여러명이 있으면 잘사는 자녀부터 부양비를 산정한다.
32	부양의무자는 일하지 않아도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다.
33	아들네소득과재산은 며느리도 해당되고 딸네소득과 재산은 사위도 해당된다.
34	이혼한 어머니도 전자식의 부양의무가 있다.
35	아버지가 재혼했으나 사망하여 새어머니만 남은경우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36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한쪽만 부양하면 된다.
37	양부모와 양자는 서로 부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
38	사위명의로 금융재산이 2억이상이면 장인 장모를 부양해야한다
39	능력없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친정부모의 부양의무가 없다.
40	부양의무자 조사시 손자의 소득은 보지 않는다.
41	긴급의료지원 신청시 예금이 300만원 이상 있으면 신청 할 수 없다
42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은 부모가 채무불이행자라도 받을 수 있다
43	지자체 장애수당은 모든 장애인에게 준다
44	장애인 연금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는다.
45	저소득 전세자금지원은 일반인도 받을 수 있다.

3. 긴급지원제도

일시적이거나 갑작스런 가계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것을 막기위해 위기별로 지원하는것이 긴급지원제도이다. (2006년부터 시행)

1.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이나 부상, 가족간의학대나 폭력, 화재 산사태 풍수해, 영세자영업자의 휴업이나폐업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했을때이고 2012년에 이혼, 휴폐업, 실업, 단전, 출소, 노숙,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2. 위기발생시점의 기준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즉 돈 버는 가구원이 사망하여 생계가 곤란하여도 사망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다.

3. 소득과 재산 기준

(1)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수급자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긴급지원	830,031	1,413,295	1,828,309	2,243,325	2,658,340

■소득에서 공제하는 지출

-6개월이상 지출되는 의료비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월세 / 자부담 사회보험료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으로 납부하고 있는 채무상환금 과 금융부채로 지출되고 있는 원금과 이자비용

(2) 재산기준

기 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 산	1억 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3) 금융재산

재산 중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한다.

-금융재산중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한다.

-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까지 인정한다.

(4) 자동차

2,000cc 이상이며 차량가액이 120만원을 넘으면 지원 받을 수 없다.

(5)부양의무자

긴급지원은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는다.

4. 긴급지원의 종류와 실시

(1) 생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2009년 3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함).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373,000	636,000	828,000	1,010,000	1,196,000	1,383,000

(2) 의료지원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3) 주거지원

위기상황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쳐 할 수 있는 주거지를 확보하여 제공한다.

(4) 해산비

(5) 장제비

(6) 동절기 연료비 지원

동절기 (10월~3월) 6개월 동안 월 8만3천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

(7) 전기요금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연체된 전기요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8) 교육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의 밀린 수업료와 화재나 수해등의 사고로 손실된 학용품과 교복 등을 지원한다.

5.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동일 상병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지역상황과 여건 등의 고려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2) 만성질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아니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다.

(3) 암지원금을 받은 경우 작년에 받은 암지원금과 당해연도 받은 암지원을 확인한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만큼만 신청가능하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이 될수 없으나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진단명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한 경우 긴급지원 신청여부 : 긴급지원은 단순히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님으로 결과를 보고 긴급지원 사유가 가능할 때 접수가능
- 차상위 의료지원자의 경우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과 같이 적용함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횟수
금전·현물 지원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최저생계비의 67.5% 수준	약101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및 예외적으로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 용지급	36.5만원 (중소도시, 4인)	6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25.1만원 (4인기준)	6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 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 8.3만원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50만원(1회)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1회 (난방 비6회)
민간기관· 단체연계 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 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
		○ 상담 등 기타 지원		없음

4. 기타 지원제도

● 공공임대주택지원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또는 매입후 관리하는 주택으로 아래와같은 다양한 주택이 있다. 주거복지의 두 축은 공공임대주택과 저리의 주거관련융자인데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거관련융자는 저리라고는 하나 이자나 보증비등의 비용을 전부 저소득층이 부담하고 있어 가격에 주는 부담이 매우크다.

▶영구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가장 싼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7,000만원~4,000만원까지 가능)
전세주택 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연2%의 임대료로 낸다.

▶매입임대주택

정부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중임대료의 30%~35%에서 공급한다.

보통 보증금 300만원선에 임대료 10만원내외이다.

▶국민임대주택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입주시의 알아둬야할 사항

1)신청시 순위 배점에 대해 숙지

주택유형별로 순위배점이 다르므로 본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해야한다

2)입주자로 선정된후 입주완료 기간내에 입주해야한다.

3)최소한의 임대보증금은 본인이 마련해야한다. (융자제도 포함)

입주자가 대개는 세대주인데 세대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다.

4)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하다.

5)거주중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임대료 분할납부등에 대해 알아둔다.

6)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전환이율:

-서울도시개발공사 전환이율: 연 6.7%

7)공공임대주택은 거주중에 타주택이나 타지역으로의 이전이 자유롭지 못하다.

●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부양가족이 있는 20세이상의 세대주로 (단독세대는 30세이상)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가구에 임대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주의점: 본인의 신용도와 급여기준을 보고 대출해줄때무에 무조건 계약을 하기보다 은행에 확인하고 해야한다.

-절차: 보증금 10%를 지급한 집계약서를 가지고 먼저 지자체의 자격심사를 받고 은행대출을 받게된다.

-수도권 8,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의 전셋집이 지원대상이다.

●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회복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특별보증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용자의 부채가 다소 많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소득 수준만 고려해 최대 1,500만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해 준다. 신용회복지원자도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부한 세대주일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 차상위계층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2011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고있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과 다니지 않는 아동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2개월미만	24개월미만	36개월미만
20만원	15만원	10만원

3)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차상위 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4)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06년 이후 출생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장애아동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병원비 등으로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제도에 따라, 등록 장애아동에 대하여 만5세까지 월 10만원~20만원씩 지원된다.

-신청: 동 주민센터

구분	36개월 미만	36개월~만5세이하
지원 금액	월 20만원	월 10만원

●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받고 있는 201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입생 신청 기간은 3월 2일~16일까지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지급되었던 미래드림장학금이 폐지되고 우수드림, 희망드림 장학금과 통합된 새로운 2012년도 장학사업이다.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예산과 대학별 장학금을 추가함에따라 1인당 등록금 부담액이 낮아진다

구분	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국가장학금 I	450만원	225만원	135만원	90만원		
국가장학금 II	평균 75만원					
대학자채노력	평균 38만원					
지원 합계액	563만원	338만원	248만원	203만원	113만원	38만원

-2012학년도 신입생은 3월중 신청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1666-5114), 장학복지팀(☎850-5242)

● 국가근로장학금

2012년에 76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4년제 75% 2년제 25%를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간: 2월6일~2월14일/ 3월2일~3월9일/ 4월2일~4월6일/

6월1일~6월8일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 (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 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시간	주간 20시간/ 야간 방학중 40시간
장학금	교내 시급 6,000원/ 교외 시급 8,000원

● 정몽구재단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몽구재단은 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학교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에게 2년간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내용의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2012년 신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 만 35세이하의 대학생(전문대생포함) 13,000명

-지원방법 1: 고리의 대출을 국민은행대출로 전환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등의 고리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은 국민은행 대출로 전환해주고 이중 3.5%의 이자를 재단이 3년간 지원한다. 연체이자도 전액 해소해준다.

-지원방법 2: 3년간 무이자대출

기존대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대출을 해주되 연6.5%의 이자를 재단이 3년간 지원한다. (대부분 학자금 융자를 받고 이자를 연체한 학생)

● 서민용 “착한적금”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적금이 출시되어 서민의 목돈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있다.

우체국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일반예금금리보다 3%높은 금리를 주는 적금을 출시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소외계층에 고금리 주는 적금]

은행	상품면	금리	한도	적용대상
우체국	더불어 자유적금	1년제 연6% 3년제 연7.4%	연 900만원	최저생계비 150%, 건강보험직장가입자 4인 기준 64,900원
국민은행	KB행복 만들기적금	1년제 연 7%	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주여성,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신한은행	새희망적금	3년제 연 6%	월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연 1,200만원 이하근로자, 근로장려금수급자
기업은행	서민 섬김통장	1년제 연7.6% 3년제 연8.2%	총 500만원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이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및 공동체이다.

융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구당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용용도	이율	보증인
창업을 위한 자금 전세보증금 자녀대학등록금 등	연리3% 고정금리에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연간 1만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함

● 소외계층의 복지관광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소득수준별로 최대 15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을 본인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틈새)계층, 저소득근로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지원절차 : 신청 → 요건확인 → 선정 → 여행상품 구매 → 지원/정산

-신청방법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내 여행바우처 시스템 이용

● 근로자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일 36,640원 월 957,220원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되며 일 36,640원이고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은 월 957,220원이다.

● 한부모가정 지원기준 변경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법정한부모가정 지원기준이 변경된다.

2012년 1월부터는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노인 틀니 지원 : 7월부터 시행

노인틀니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은 틀니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한다.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도 적용된다.

● 의료분쟁전문조정기관 출범

4월 8일에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된다.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신청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되며 분쟁처리기간이 90일~120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비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하면 된다

MEMO



복지관 페이스북
www.facebook.com/sinwc0414

MEMO



복지관 트위터

www.twitter.com/sinwc0414

실무자역량강화 프로젝트 『주거복지학교』

사회복지 거꾸로 보기

이 희 범

(사회복지발전소 위원)

사회복지 거꾸로 보기

1. 들어가며

사회복지 거꾸로 보기는

“이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화는 충분하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그것을 나누는 일 혹은 나누도록 강제하는 일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라는 사회복지현장활동가의 고민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김대중정권의 집권이후 사회복지에 이른바 ‘생산적복지’라는 요란한 구호아래 요동을 치기 시작하였고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에 있어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참여복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뒤를 이어 이명박정부는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 하에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을 능동적 복지의 4대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권차원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여전히 복지제도는 신뢰받지 못하고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비해 일반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시혜적이며 보충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대중이나 노동계급에게 있어서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사회복지운동단체 차원에서 요구되어왔던 사회복지예산의 확충과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예산의 저열성을 폭로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져 왔지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참여가 미온적이거나 유형별 기관의 예산확보를 위한 소극적 참여가 상층차원으로 이루어지며 현장의 활동가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현장의 파편화된 모습은 무엇보다 현장의 참여와 실천과제들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이러한 운동들이 산발적(사건별) 혹은 지역별 차원으로 진행되면서 집중화된 대정부요구 및 투쟁으로 전개해나가지 못한 한계에 따른 것이다. 잊지말아야 할 지점은 사회복지의 발달수준은 역사적으로 제단체들간의 연대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와 관련한 요구 및 투쟁은 현장의 참여와 실천과제의 개발, 제단체들간의 연대, 무엇보다 사회적약자들 스스로 단결하고 주체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

1) 사회복지란 정치, 경제와 분리해 이해할 수 있는가?

1930년대 대공황발생이전 고전파 경제이론가들은 자본주의에 위기는 없다고 단언하였으며 그 중요한 근거는 세이의 법칙(재화의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하므로 생산과잉은 존재할 수 없다)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은 그들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케인즈에 의해 유효수요의 원리(공급은 수요에 의해 한정된다)가 주장되면서 유효수요¹⁾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고용과 사회복지의 확대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복지국가 또는 복지제도의 확대속에서도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본이 최대의 가치인 신자유주의를 잉태하게 되었다.(대처리즘)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며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사회복지 및 사회공공성 분야에 요구하거나 실행해 나간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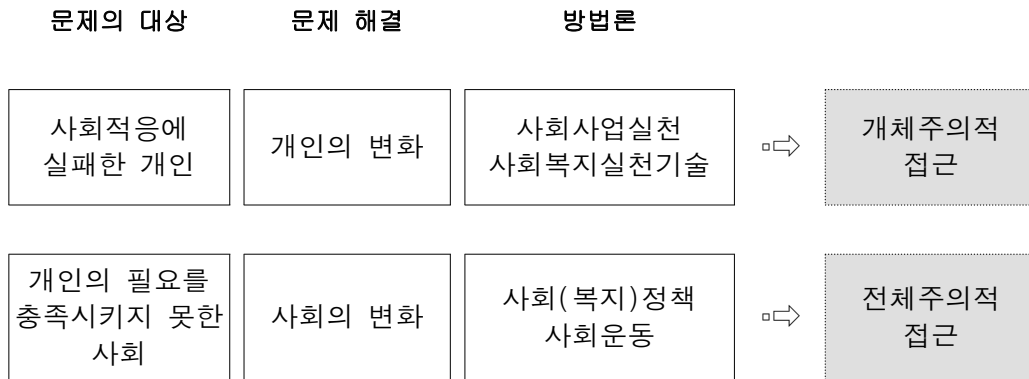
- ① 사회복지예산삭감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지출을 줄이고 기업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축소토록 한다. 통계상으로만 보자면야 사회복지예산은 소폭으로 증가되거나 동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②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 사회복지시설 뿐만아니라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고 심지어 공기업을 해외자본에 팔아넘기기 까지 한다.
- ③ 복지수급대상과 범위 축소 :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수급대상자의 수를 조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부담을 덜어내고 개인 및 가족의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④ 형식적 사회적 안전망 확충 : 사회복지란 권리가 아니라 시혜와 동정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현장활동가 혹은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 함은 욕구(needs)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응을 위한 개인(가족과 지역사회 포함)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사회변화를 꾀해 개인의 필요(위험도 포함)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돈을 갖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제행위의 욕구로 소비물자를 구입하는 소비수요와 공장설비나 원료구입등 생산을 위한 투자수요가 있다.

<그림 1>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두 가지 접근



가치 측면에서 이 두 접근방법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사회복지를 전자(개체주의적 접근)라고 하면 크게는 사회변화에 대한 개인의 적응여부에 따라 대상자가 구별된다. 문제는 무엇을 부적응으로 볼 것인가와 같은 구별의 기준을 둘러싸고 표출된다. 반면에 사회복지를 후자(전체주의적 접근)라고 하면 문제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둘러싸고 표출된다. 따라서 정치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를 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든 후자에서 접근하든 시장에서 구매력을 갖춘 개인에게 사회복지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에게 사회복지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생존권 보장으로부터 보편적인 사회권²⁾으로 발달해 온 사회복지의 요인을 어디에서 찾는냐가 두 가지 접근과 사회복지현장활동가의 관점을 연결짓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사회구성원의 욕구(또는 필요)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늘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었고, 그러한 요구가 정치영역으로 동원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처한 물질적 조건은 개선되어졌고 그 결과로 평등과 연대가 획득되었다. 이것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3. 한국사회의 현상과 사회복지

1) 사회적 양극화 : 한국사회의 핵폭탄

관점 1. 이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화는 충분하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그것을 나누는 일 혹은 나누도록 강제하는 일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관점 2. 세상은 재화(부)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그것을 나눌 만큼 충분히 부유하지 않다.

2)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로 노동, 건강, 교육, 주거, 식량, 물, 사회보장, 문화생활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양극화(兩極化, polarization)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사전적 의미와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가리키며 특히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 있어 양극화는 이미 IMF 사태를 계기로 심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대통령 신년 연설을 통해 국정 의 최우선 순위를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두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부터이다. 양극화는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폭발이 예고되어 있는 핵폭탄’이다. 절망스러운 것은 관점2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의 문제를 책임있게 풀어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양극화의 수혜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라는 점이다. 그들에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은 양극화 속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들의 부를 지키는 것이고, 대중들의 불안과 고통은 터지지 않도록 조절하면 충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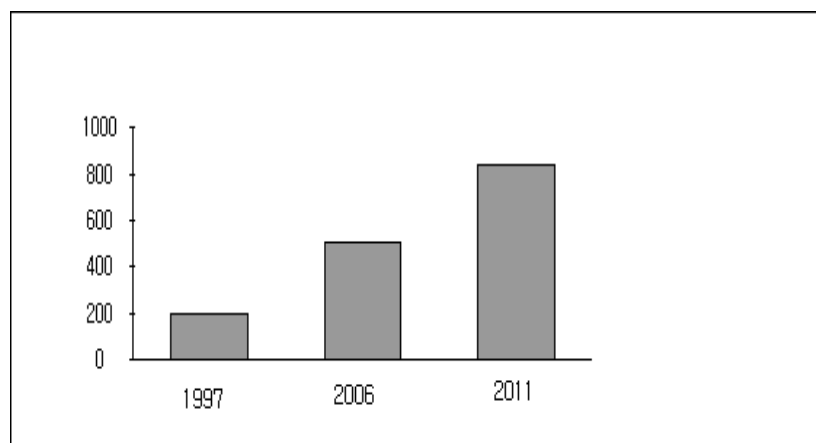
어쨌든 간에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의제로 상정되었고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사회복지현장활동가의 입장과 해법을 제시하고 보수적 입장의 미봉책을 내세우는 이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이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과 실천과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2) 사회 지표를 통해 확인하는 양극화

① 가계부채 - 빚 권하는 사회, 자살 독촉하는 사회

2011년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총 840조 9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전의 200조원에 비해 4.2배 증가한 수치로 국내 전체가구 평균 부채는 5,205만원으로 2006년 9월과 비교하여 약 1.6배 증가한 수치이다. 평균 가계부채중 금융부채는 3,597만원, 임대보증금은 1,608만원으로 조사돼 전체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9.1%와 30.9%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림 2> 가계부채 증가추이 (단위 : 조)



몇가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금융부채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이 54.8%로 평균 2천850만원이라는 사실과 임대보증금이 가계부채의 30.9%인 1,608만원이라는 사실이다. 즉 IMF 외환위기이후 한국사회를 광풍에 휩싸이게 하였던 부동산투기(개발) 열기는 일반대중들에게 빚을 권하는 방식으로 확대재생산 되었고 결과적으로 2011년 9월말 기준 전년도 국민총소득 1,173조원의 약 72%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남긴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한 해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은 전년도 국민총소득의 4.8%인 56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110만원꼴로 이자를 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소득은 줄고, 이자는 늘어 일반대중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 한국사회 자살자 증감

연도	자살자	10만명당 자살자	증감치	하루 평균 자살자
2010	15566	31.2	0.20%	42.6명
2009	15413	31	5.00%	42.2명
2008	12858	26	1.20%	35.2명
2007	12174	24.8	3.00%	33.3명
2006	10653	21.8	2.90%	29.1명
2005	12011	24.7	1.00%	32.9명
2004	11492	23.7	1.10%	31.4명
2003	10898	22.6	4.70%	29.8명
2002	8612	17.9	3.80%	23.5명
2001	6911	14.1	0.50%	18.9명
1998	8622	18.4		23.6명
1995	4930	10.8		13.5명

출 처 : 보건복지부

한국 사회의 자살증가추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청소년, 청년, 노인의 자살율은 어느덧 세계1위이며 전연령층으로 보자면 세계2위, OECD 국가중 1위인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자살율이 높은 이유로는 첫째로 주위에서 받는 기대감에 대한 부담, 둘째는 주위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라는 분석이 있다. 특히 부모들, 친척들, 이웃들로부터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과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 성향의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사회는 자신들이 속한 경제사회적 표준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있어 자살이라는 상황은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압박이 심한 반면 그것을 피할 통로가 없다고 느껴질 때, 발생하기 쉬우며 사회 환경과 문화가 개인에게 주는 압력이 크면 클 수록 자살율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소득불균등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이루어왔으나 최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소득분배와 관련된 사회지표는 훨씬 빠르게 악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불균등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적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재정이 복지국가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요란하게 선전을 하고 있으나 실상 재정의 복지기능은 OECD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가장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가 고용격차로 이어지며 소득불균등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사회의 소득불균등 지표는 지속적으로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과 사회단체들은 실제 소득불균등 정도는 지니계수로 표현되는 불균등 정도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 지니계수³⁾

구분	1990	1998	2000	2005	2010
시장소득 ⁴⁾	0.266	0.293	0.279	0.298	0.315

자료 : 통계청

<표 2> 5분위배율⁵⁾

(배)

구분	1990	1998	2000	2005	2010
5분위 배율	3.72	4.55	4.05	4.55	4.82

자료 : 통계청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의 측정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중위소득 50%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상대적빈곤율은 1990년 7.1%였으나 2010년에는 12.5%로 대폭 상승하였다. 반면 중위소득 150%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7.5%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9.5%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0년 현재 20.0%로 확인되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

또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액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1인당 소득금액을 살펴보면

3)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전이전소득

5)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대비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배수로 나타낸다.

6)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 60%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OECD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사회내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상위 20%는 5,884만원, 하위 20%는 303만원으로 17.7배 었으며, 2005년에는 8,340만원과 218만원으로 38.3배에 달하였고 2009년에는 9,020만원과 199만원으로 그 격차는 무려 8,821만원 45.4배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한국사회와 사회복지

논쟁 1. 사회복지재정을 포함한 정부의 지출은 ‘생산적’ 인가?

논쟁 2. 현시기 사회복지는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인가?

사회복지는 물론, 좌파이든 우파이든 모두가 동의하듯이,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 재정을 포함한 정부의 지출이 ‘생산적’ 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가 되든, 사회복지의 제도 개선과 확대에 투입되든지 간에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어도 국가는 잉여가치를 생산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국가의 모든 재정지출은 비생산적 지출이다.⁷⁾ 따라서 정부의 지출은 그 규모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소위 자본가들이 정부에 제공하는 잉여가치(세금)보다 더 큰 잉여가치를 정부지출을 통하여 획득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를 요구하거나 사회복지제도의 축소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하였던 1970년대 대불황에서 자본가들과 그들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출은 ‘비생산적’ 이기 때문에 사회적약자, 노동자, 사회복지현장활동가들은 사회복지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이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위한 요구와 투쟁은 늘 사회적구매력이 떨어지는 사회적약자들의 몫이었고 오랜기간의 투쟁을 통해 얻은 산물이며, 특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정도에 따라 한 국가의 사회복지수준은 개선되거나 확대되어 왔음을 간과하는 대단히 비정치적태도 이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활동가에게 주술처럼 퍼져있는 정치적 중립에(따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지만)대한 태도가 견지되는 한 현장의 문제제기와 사회복지의 확대(재정과 제도) 요구는 언제나처럼 산발적, 지엽적인 활동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올 한해는 단언컨대 여러 학자와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주장할 것이다. 놀라운 점은 단지 5년전에 ‘성장과 신자유주의’ 가 시대정신임을 주장했던 이들까지 사회적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모두가 ‘사회복지’ 가 시대정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사회복지의 현시기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이며 근본적인 해법이 될수 있는 것일까?

1930년대 대공황이후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인 서구의 자본주의든 1970년대 불황의 시대에 잉태

7) 김수행·정병기·홍태영. 2006.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수행. 2005.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를 채택한 국가이든 복지는 늘 존재해 왔고 국가 재정의 중요한 지출을 차지하였다. 심지어 한국사회에서는 군사정권하에서도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요한 통치전략으로 활용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조금은 빼어난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포장하는 이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복지’가 왜곡된 형태이거나 늘 그래왔듯이 정치적 레토릭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를 극단으로 치닫게한 근본적인 원인, 즉 공정하지 않은 분배의 원칙을 고치는 해법이 아니라, 양극화라는 구조 속에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제공하는 의미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게 될 때 어떠한 움직임이나 운동도 없던 이들이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없이 다급하게 주장하는 사회복지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만약 사회공공성이 강화되어 의무급식, 의무교육, 무상의료를 통해 사회성원이 성장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얻게 되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고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노동능력이 없거나 시장참여가 어려운 약자들에게는 생계급여를 제공하지만 그 외의 소수자나 경계선에 위치한 약자들에 대해서 시장을 통해 복지문제와 생존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계속된다면 ‘사회복지’는 ‘땀질식 위로’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자본은 약화되고 특권적 분배가 지배하는 신분사회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복지’가 시대정신이며 근본적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종결선언과 새로운 가치에 입각한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4) 사회복지의 이상기류

① 사회복지재정지출은 복지국가의 단계로 진입하였는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올해 우리나라 복지비중이 재정의 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적시하자면 이 말은 속된말로 ‘구라’임이 틀림없다.

<표 3> 2012년 예산 총량 개요 (단위: 조원, %)

구 분	2011	2012	증가액 (증가율)
실질 경제성장률	5.0%	4.5%	
총수입	314.4	344.1	29.7 (9.5)
총지출	309.1	326.1	17.0 (5.5)
국가채무 (GDP %)	435.5 (35.1)	448.2 (32.8)	12.7

- 출처: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안)” (2011. 9. 27).

먼저 2012년 예산총량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듯이, 내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 5.5%는 세입 증가율 9.5%보다 무려 4% 포인트나 낮다. 이는 2010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3% 낮게 두는 ‘재정준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관리 목표는 재정이 수행해야 할 목적이 상실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분야별 재정지출의 계획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재정이 개발중심의 ‘경제지출’에서 ‘사회지출’로 전환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올해 예산안에서 경제 분야의 몫은 크다. 이 중 주목해야 할 분야가 SOC 지출분야이다. <표 4>를 보면, 우선 SOC 분야의 재정지출이 감소하고 있는것이 눈에 띈다. 올해 SOC 지출이 22.6조원으로 작년 24.4조원에 비해 1.8조, 7.3%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SOC 건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SOC 건설이 국가재정을 대신하여 민간자본이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투자는 정부에게 초기의 재정투자 부담을 줄여주지만,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방안이다. 이미 2008년 기준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망의 40%, 학교시설의 85%, 하수관거의 41%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4> 2012년 중앙정부 분야별 지출 (단위: 조원, %)

구 분	' 11년(A)	' 12(안)(B)	증감(B-A)	증가율
1. R&D	14.9	16.0	1.1	7.3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중소기업)	15.2 (6.0)	15.2 (6.2)	0.1 (0.2)	0.6 (3.1)
3. SOC (4대강 사업 제외시)	24.4 (21.4)	22.6 (22.3)	△1.8 (0.9)	△7.3 (4.5)
4. 농림·수산·식품 (농림)	17.6 (15.1)	18.1 (15.8)	0.5 (0.7)	2.7 (4.7)
5. 보건·복지·노동	86.4	92.0	5.6	6.4
6. 교 육 (지방교육교부금)	41.2 (35.3)	45.1 (38.5)	3.9 (3.2)	9.3 (9.1)
7. 문화·체육·관광	4.2	4.4	0.2	5.7
8. 환 경	5.8	6.1	0.3	6.3
9. 국 방	31.4	33.2	1.8	5.6
10. 외교·통일	3.7	3.9	0.2	8.1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0.8	6.5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52.4 (30.2)	56.6 (33.1)	4.2 (2.9)	8.2 (9.5)
총 지 출	309.1	326.1	17.0	5.5

- 출처: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안)” (2011. 9. 27).

그렇다면 정부관료와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사회도 복지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자화자찬한 복지재정의 지출은 어떠한가? 재정지출의 총액을 살펴보면 복지 지출은 작년 86.4조원에서 내년 92.0조원으로 5.6조 원, 6.4%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사회지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복지재정의 지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가? 불편한 진실은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떠한 정권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복지재정의 지출은 늘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분야는 법령으로 정하여진 의무지출이 큰 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 연금의 지출이 자연증가하고, 노인수가 늘어나면 기초노령연금 지출액도 증가하는데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나 의지, 우선순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해지는 지출이다.

<표 5> 2012년 복지분야 증가액 구성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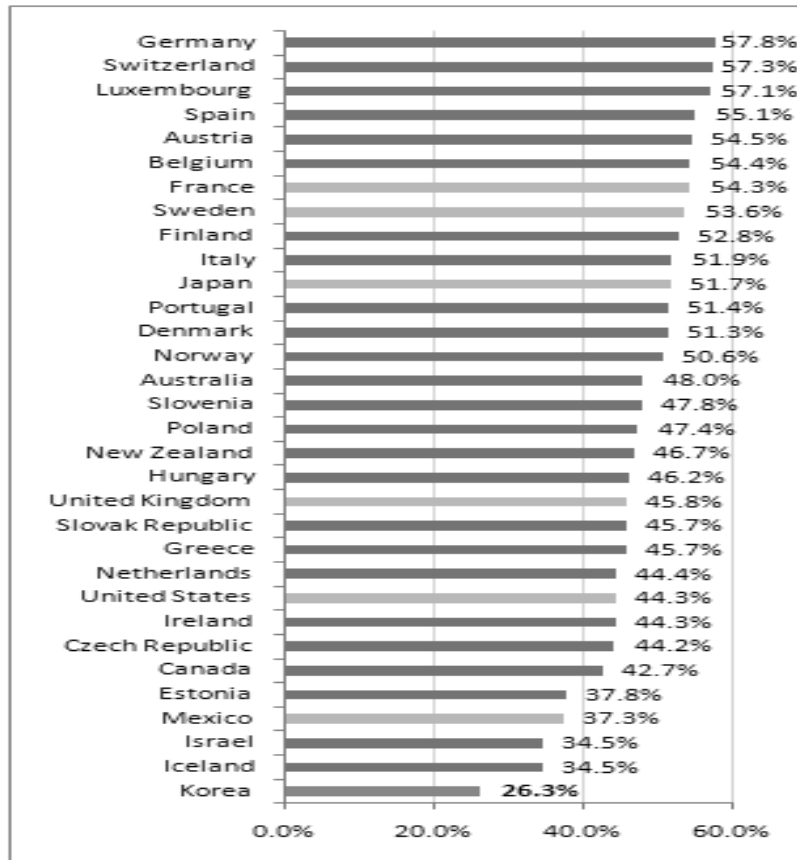
항목		금액
의무지출	공적연금	3.2조
	기초생활보장급여	0.4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0.3조
	보훈보상금	0.2조
	보육료 지원	0.1조
	기초노령연금	0.1조
	소계	4.3조
주택관련 지출		0.9조
기타 지출		0.4조
총액		5.6조

- 출처: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안)” (2011. 9. 27)

<표 5>를 보면 의무지출분, 주택지출분 증가분이 최소 5.2조원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편성 재량권이 적용된 복지지출은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0.4조원 이하이다. 이는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권이 개입되는 복지지출 증가는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의무지출과 주택관련 지출을 합친 5.2조원이 차지하는 증가율이 6.0%로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 5.5%보다 높다. 결국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하여 복지지출을 늘리기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복지재정의 지출은 늘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정대비 복지 비중 28.2%는 어떻게 평가해야할 수치인가? 현재 OECD 국가들은 재정의 평균 절반을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 28.2%의 복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이 재정의 20%대에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사회복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늘 역대최고의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하에서 OECD 국가들중 꼴찌의 사회복지재정을 투입하는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에 진입하였는가?

<그림 4> 정부총지출 대비 공공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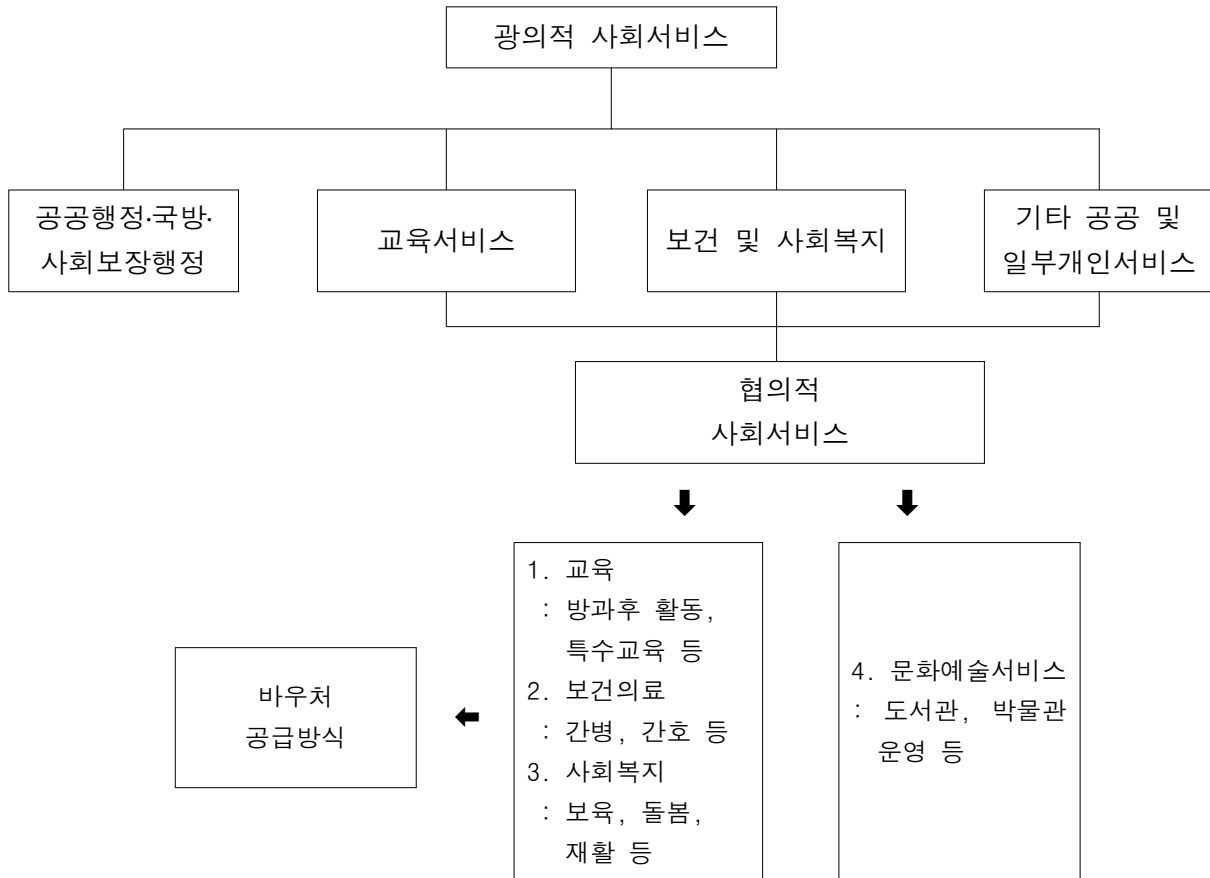
-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② 사회서비스의 확대전략? -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및 일자리창출 전략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보건·복지 서비스는 시장의 일반 상품과는 다르게 사회적 공공성⁸⁾에 기반을 둔다. 특히하게도 한국사회에 있어 보건·복지 서비스는 재원의 형성과 지출은 공공적 형태를 취하면서 서비스 공급측면에서는 민간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에 맡겨져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의 질은 오로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는 가속화되는 고령화,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등과 같은 변화로 인하여 가족이나 시장에 맡겨져있던 사적 영역의 돌봄노동에 대한 공식화가 요구되어지며 2006년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이 발표되고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담당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듯 보였다.

8)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 가운데 ‘공공영역의 인력이나 시설·기관 등에 의해 제공되거나 관리되는 서비스’란 개념을 의미한다.

<그림 5> 사회서비스의 광의적·협의적 개념도



이는 그동안 국가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공공적급여를 제공하는 잔여적이고 선별적이었던 복지서비스에 대해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환경과 같이 다섯 분야에 있어 보다 제도적이고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지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당연히 여겨지던 공공성 확대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복지의 시장형성과 일자리 창출에만 역점을 두는 기형적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즉 정부정책이 사회복지 영역의 공급체계 전환을 통한 대상자 확대보다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공급체의 출현과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실행전략은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사회서비스의 품질제고로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공급 자간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전략으로 특징지워지는 사회 서비스 확충전략은 공공 인프라의 강화나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전달보다는 복지시장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한편으로는 복지의 시장화 전략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는 점

을 의미하고 있다.

논쟁 1. 사회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화전략은 유효한 것인가?

논쟁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정책은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가능한 것인가?

보건·복지 분야 가운데 이를테면 의료분야가 시장의 원리에 지배되는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물론 의료산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의 창출과 고용확대는 가능할 것이다. 단적으로 미국의 경우 의료산업(병원자본,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의 발전은 눈부시나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없어 의료혜택을 적절히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이 상당한 수준이다⁹⁾.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보건과 복지영역에 대한 시장의 지배로 빚어지는 폐해를 짐작케 하며 사회서비스 확대를 시장화전략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나서서 사적 공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때 사회서비스 비용의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공적책임을 시장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일자리 창출 전략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근로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시범사업과 보다 세분화된(공익형과 수익형)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일자리 창출전략의 관점에서 고용의 형태, 임금의 수준, 해당 종사자에 대한 노동자성 문제, 노동조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 전략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쁜 일자리를 바탕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모순이 확대재생산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관련 부문의 노동조건과 노동권 안정의 희생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는 ‘탈복지성’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4. 사회복지현장활동가 무엇을 할것인가?

1) 사회복지(현장활동가)의 정체성 - 누구냐? 난?¹⁰⁾

9) 미국의 공적 의료제도는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대상)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만 존재한다. 아동 8백만 이상을 포함해 국민 중 4,500만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3월 21일 - 미국 하원은 상원의 HR 3590 법률안을 219대 212로 통과시켰다.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9400억달러를 투입,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320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수혜율을 95%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10) 본문의 내용은 (가칭) 사회복지발전소 구성원들이 정기·수시모임시 진행된 토론내용의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전제한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치열한 현장을 지키며 절망을 온 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들의 문제의식과 용기에 깊이 감사한다.

주장 1. 윤리성 - 자혜적 봉사자 시각

사회복지활동의 특성 중 ‘윤리성’을 특화시킨 개념으로, ‘성직의식’이나 ‘희생적, 헌신적 태도’를 강조한다. 이러한 윤리성의 강조는 사회복지영역의 임노동을 부정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내며 열악한 존재조건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억압으로 작용한다.

주장 2. 전문성 - 전문가주의

사회복지노동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서비스’로 바라보는 입장이며,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지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여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나 사회구조적 모순에 눈을 감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주장 3. 고용관계성 - 사회복지노동자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할 때만이 사회복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복지노동자는 1) 생산적 노동자와는 달리 잉여가치 생산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서비스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비생산적 노동계급이며 2) 자본-임노동의 모순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국가 및 시설관리계층과의 중층적 임노동관계에 존재하는 특성을 갖는다.

흔히 사회복지와 교육의 공통점이 사회의 재생산기능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교육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며, 사회복지도 사회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과 사회복지의 한계는 두 영역 모두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교육은 주체적 시민을 양성하는 창조적인 장으로 자리잡아야 하지만 권위와 복종을 학습시키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도 성장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사회적 약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또한 정치권력의 상황적 필요에 의해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다.

그러나 두 영역의 재생산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확연히 구분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의 경우 ‘유능한 인재의 양성이 필수’라는 인식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무교육이 확대되었고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복지도 보편적 권리이기보다는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자를 위한 사회제도로 인식됨으로써 사회구성원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못하였다.

또한 이미 교육과 사회복지의 책임은 이미 사회적으로 규명되었는데 교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교육의 공급주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고 사회복지의 경우 복지의 재원을 국가가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두 영역 모두에서 국가는 최소한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장이나 사적영역에 방치하여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경우 사립과 공립,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공적복지와 사적복지로

공급주체의 이중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주체의 형태와 내용의 측면에서 역전가능성¹¹⁾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교육과 사회복지의 또다른 유사점은 봉사와 희생이 강조되어 왔다는 점이다. 교육과 사회복지활동의 특성 중 이러한 ‘윤리성’을 특화시켜 강조하다보니 ‘성직자 의식’이나 ‘헌신적 태도’가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두 가지 영역에서 자본-임노동관계를 무시하거나 배제시키고 열악한 조건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반면 교육현장의 교사에게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지위, 역할 등 일정한 상이 존재하지만 사회복지현장의 활동가에게는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사에게는 바람직한 인재 양성이라는 명확하며 권위적인 역할과 지위가 부여되어 있으나 사회복지활동가에게는 대중적 인식과 사회적 정의가 미약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적어도 현재까지 전문직업,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확립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전문가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다른 것들을 놓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펼칠 현장의 조건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태에서의 전문가 지위 확보를 위한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고용관계성 측면에서도 두 영역의 유사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공급주체 측면에서 두 영역의 책임이 국가에 있어 국가에 의해 고용되거나 고용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법인이나 시설, 재단에 고용되어 이들의 관리를 받게 된다. 즉 교사나 사회복지현장의 활동가들은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관의 상급지위자를 상대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 고용관계는 의견개진이나 다양한 활동전개에 있어 투쟁 대상 선정에 모호성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현장의 경우 활동가의 근무현장에 따른 이슈가 다르고 배타성 등으로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으며 활동가 주체들의 능동적 인식도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2)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활동

① 사회복지에 대한 재인식과 의식화

사회복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단초는 정부나 국회 혹은 관료에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한 복지국가의 확립이 단지 “예산의 총액”을 늘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집행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계급간 타협의 산물이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늘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운동(movement)’ 없는 사회복지의 최소한의 것을 쥐어주는 것이기에 현장에서의 문제제기와 집단적 요구가 운동으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사회복지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날 갑자기 사회복지가 시대정신임

11) 이미 교육의 경우 사학의 영역이 공립의 영역보다 훨씬 크게 자리잡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경우 시장화전략에 따라 점차 사회적복지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을 주장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의 확대는 “정책과 돈의 문제”라고 선전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도록 하자. 문제를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현재의 “사회시스템을 그대로 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 또한 자기기만이고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복지활동가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토론이 시작되고서야 사회복지현장활동가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고 비로소 전문성뒤에 감춰진 사회복지현장활동가들의 배타성을 대면하는 불편한진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의식의 전환이 토대가 되고서야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

② 현장 민주주의(workplace democracy) 확립

이들테면 선거를 통하여 정권이 바뀌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회복지의 확충과 재정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사회복지에는 왜 실현되지 못하는가? 정치적 절차와 내용의 민주주의에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매번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거나 훼손되지 않는 “평등을 사회시스템안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지 제도개선과 선거에서의 승리로는 부족하다. 현장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양한 활동가들과 사회적 약자가 공존하고 있는 현장으로 확장시켜야만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치료사, 상담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존재하여 인적구성의 균질성이 떨어지는 사회복지현장의 민주주의 확립은 필수과제인 것이다. 이는 현장의 “권력관계”에 대한 재확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정부와 지자체와의 대등한 관계설정과 현장내에 존재하고 있는 “배타성”을 극복하여 공동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③ 지역내에서의 소모임 구성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현장간 교류는 대부분 프로그램 및 실천기술에 대한 정보의 공유이거나 공동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장의 활동가들이 무기력하거나 분절된 상태에서 파편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지향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사적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통로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소모임은 현장의 당면과제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준비모임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소모임의 활성화는 당연히 소모임의 고민과 토론으로 이어지고 이는 양적증대를 통하여 공통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다. 많은 사회복지현장의 활동가들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모임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사회복지현장의 활동가들이 “무임승차”에 기대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5. 나오며...

제작년 서유럽 사민주의의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에서 연금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하자 10대들이 ‘자본주의 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프랑스의 10대들은 적어도 사르코지를 ‘쥐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 애쓰고 그 본질로 접근하려 했던 것 같다. 때때로 본질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주위로부터 과도한 비난을 들을수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양식으로 오해받곤 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거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문제의 핵심은 금융자본주의에 있다고 주장하며 은행거래를 중지하자는 운동을 펼친 그 10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청년들이었던가?

모두가 사회복지를 외치고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적 토대 마련 요구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노발대발 했던 이들조차도 대세는 사회복지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지 않는 이상 어디서나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들이다. 개인적 경험에 근거하자면, 어디서나 좋은 사람이란 대부분 뻔뻔스러운 정도의 처세술을 발휘하는 위선자들 이었다.

사회복지현장의 활동가들은 어떠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며 도입된 평가제도 이후 사회복지현장은 더욱 지역의 신뢰를 받고 활동가들은 더 열정적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혹시 현장의 비민주적 상황은 도외시하거나 전문가의식에 타직종의 현장성원들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고 협력과 연대의 정신은 이론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기며 오로지 프로그램의 성공만을 위해 연대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며 혹시라도 자신이나 시설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문제에 대한 참여는 사회단체나 사회적 약자들의 몫으로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고백하자면 상당한 기간 사회복지현장에서 스스로 ‘좋은일’을 하고 있다며 위무하던 나의 모습이었다.

효율성과 잉여가치만을 주장하는 시장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피말리게 경쟁하게 만들지만, 운동은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연대해야만 가능하다. 언제나 시장과 권력은 "모두가 부자가 되는 사회"를 달콤하게 속삭이지만, 운동은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투박하게 주장할 뿐이다. 만약 사회복지현장의 활동가들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평등한 세상은 정치권력이나 자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러한 신념을 간직하고 운동해가는 이들에 의해 획득되는 것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운동하는 여배우, 운동하는 판사, 운동하는 종교인, 운동하는 운동선수.....그리고 운동하는 사회복지현장의 활동가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가길,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MEMO



복지관 페이스북
www.facebook.com/sinwc0414

MEMO



복지관 트위터

www.twitter.com/sinwc0414

부 록

1. 또 하나의 재가복지 상상하기 “주거복지” 1탄
2. 양천주거복지센터 사업 소개
3. 함께하는 사람들

※ 본 자료는 2011년 3월 11일(금)에 진행되었던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세미나 시 「또 하나의 재가복지 상상하기 '주거복지」라는 주제로 진행된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님의 강연 자료입니다

또 하나의 재가복지 상상하기 : 주거복지

남 기 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최근 주거복지라는 용어는 유행처럼 활용되곤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낯선 용어이기도 하다. 복지 영역에서 유행처럼 하나 만들어지는 분야인 듯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지역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던 역할인 듯 싶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씨는 얼마 전 정신건강과 알코올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퇴소하였다. 퇴소 후 잠시 쪽방과 다중이용시설을 전전하던 중,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로 선정되었다.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의 문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는 못하였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도 모자라고, 지역사회독립생활에 충분할만큼의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지 못한 상황이다. 음식지원 등 일상생활모니터링, 사례관리, 사회적 지지망 연계, 심지어 투약관리 등의 활동이 필요한데 바로 옆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서울 반대편에 있는 퇴소했던 노숙인 시설(매입임대주택사업 운영기관)에서만 관리가 이루어진다.

● 사회복지실천 이론틀에서 방기되어 온 주거욕구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주거욕구 자체로는 복지정책적 대상인 '사회적 욕구'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에서의 주택에 대한 문제제기나 관심은 적었다. 이는 주택을 역시 사회적 욕구로서의 집합적 소비로 조망하는 관점이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드러나지 않은 탓이다. 결국 주거욕구에 대한 대응으로서가 아니라 더 취약한 특정 집단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서 잔여적 주거지원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의 주요한 특성인 시설 중심적 접근도 관련이 있다. 대체로 취약성을 가진 인구층에 대해서는 생활시설 입소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 우세했다. 때문에 오랜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의 주거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 영역 외의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주거 욕구가 가장 부각되는 홈리스(부랑인)에 대해서도 생활시설 통합수용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들이 그러한 입장을 나타낸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생활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반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실천(Community Based Practice)이나 정상화(Normalization), 통합화(Integration)의 강조 등이다. 소위 '탈시설화'의 움직임 등이 시설중심보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보호로 전환 논의와 관련된다. 여기에서는 주거에 대한 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에서는 소위 '직선적 연속체 모형'에 의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이야기된 바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 등 취약한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개입이 강한 주거지원에서부터 개입이 약한 주거지원으로 A->B->C->D의 순서를 통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전하여 독립적인 지역사회생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식이다.¹⁾ 여기서 A는 치료시설이나 생활시설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그룹홈, 위성아파트와 같은 지원주거 등의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 일반 독립주거 생활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그림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의 Supportive Housing Program 이나 보호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 구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주요한 차이점은 첫 시작점(A)이 어떤 지점으로 설정되는가이다. 외국의 지원주거 프로그램에서는 대개 주거가 없는 거리생활(Homeless) 상태에서부터 지역사회 일반 독립주거로의 이전을 설정하곤 하는데 비하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직선적 연속체 모형에서는 생활시설이 첫 지점으로 설정된다. 사회복지 내에서는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의 퇴소와 지역사회 복귀라는 측면에서 주거지원을 감안한다는 것이고 결국 특수한 취약성에 의해 시설보호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만이 표적이 된다. 시설의 대체재로서 지역사회 주거라는 의미는 '보호의 방식' 문제와 선택이다. 이는 일반적 주거권을 인정한 주거지원과는 다르다. 주거취약성 자체는 사회복지 내에서의 개입 욕구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해 시설보호의 대체재로서 지역사회보호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주거확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 주택과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회하는 회피전략을 취해왔고 주거확보의 주장 측면에서는 극히 무기력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평가일 것이다.

1) 직선적 연속체 모형이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거지원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을 대안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직선적 연속체 모형은 논리적으로는 명쾌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순차적 이전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이 순차적 이전 자체가 클라이언트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나 프로그램 이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은 클라이언트와 프로그램 전문가의 논의에 기초하여 현재 심리사회적 기능수준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준을 결정하고 가급적 그 상태에서 필요한 기능수행을 학습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사회 복귀는 궁극적인 목표표로 염두에 두되 잦은 프로그램 이전의 폐해를 경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직선적연속체모형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사회복지실천 : Housing First vs. Housing Ready

주거복지가 주택복지라고 불리우지 않는 것은 관심의 초점이 주택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주택’의 공급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인 생활이 강조되는 것이다. 때문에 주거복지의 개념은 ‘Housing Welfare’로서만이 아니라 ‘Community Residence Welfare’ 라는 측면에서 조망되기도 한다(이창석, 2008). 이는 필연적으로 주거공간의 확보 이외에 ‘주거지원서비스’를 핵심적인 활동 내용으로 삼게 된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취약계층이 (제공된 주거 등을 토대로) 지역사회 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의 관리, 주택관리와 관련된 대응, 관련된 기관과의 행정적 처리 등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의 상당수는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주거가 지원되더라도 안정적 주거생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다.

이는 처음에 확보된 주택으로 이전하는 문제에서부터 필요해진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 전기나 수도 설비 등의 연결, 필수적 가구나 비품의 구매 혹은 확보 등이 관련된다. 이어서 주택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나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유지관리, 임대료의 지불, 수선의 요청 등과 관련한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숙지하는 것도 필요해진다. 이웃과의 갈등이나 기타 문제로 인한 주거생활의 곤란에 대한 대응,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모색과 의뢰 등도 중요한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이 된다(서종균, 2009).

지역사회 통합적 주거생활에 초점을 두는 주거복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제공이라는 물리적 영역의 경성 서비스(Hard Service)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와 지역사회보호 등 연성 서비스(soft service)로서의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영국에서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Supporting People Service에서도 주택의 제공 외에 주거지원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행하고 있다.

- 보조금 신청과 가계 관리에 대한 지원
- 주택에 가구를 갖추는 것에 대한 지원
- 주택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도움
- 사회적 활동 및 친교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
- 상담과 심리적 지지
- 훈련 등을 탐색하는 것을 지원
- 임대기관, 보조금 관련 기관 등 다른 기관과의 행정적 처리를 지원
- 새로운 주거를 찾는 경우에 대한 지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와 관련된 서비스, 스웨덴의 MHC에서 사회주택복지사(Social Housing Worker)의 활동 등도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해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구체적 실천전략의 측면에서 주거의 제공과 아울러 휴먼서비스의 결합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가 하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주거준비(Housing Ready)와 주거우선(Housing First)의 대비되는 모형으로 구체화되곤 한다.

주거준비접근은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 독립주거생활에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수준을 사정하여 이 기능수준이 충분해지도록 휴먼서비스를 통해 지원한 후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능수준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휴먼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시설이나 혹은 관리감독의 정도가 강한 지역사회주거지를 임시로 활용하게 한다. 노숙인의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주거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기능적 취약요소의 '해독을 전제로(Clean and Sober)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주거에 대한 '직선적 연속체 모형'에서 상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방식이다.

대조적으로 주거우선접근은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유지하고 독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가 휴먼서비스의 제공과 점검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거준비 전략이 다른 서비스를 통해 준비된 대상자에 대해서 그에 맞는 주거를 연계하는 식으로 주거를 후순위의 내용으로 연계하는데 반해서, 주거우선 전략에서는 일단 지역사회 주거생활을 전제하여 그에 맞는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은 실제에서 배타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혼합적인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주거우선 접근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Lanzerotti, etc. 2004, Beyond Shelter, 2009).

첫째는 초기의 위기개입(Initial Crisis Intervention)이다. 사회복지실천의 단기개입모형으로 알려진 위기개입의 방식을 주거취약계층의 즉각적 상황에 적용하여 상담과 사례관리의 단초로 삼는다.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영구적인 주거(Permanent Housing)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탐색과 연결이다. 이는 주거욕구의 명확화, 임대정보와 주거보조 수단의 정보제공 및 연계, 주거유지 관련 절차적 측면에 대한 교육, 이사비용이나 보증금에 대한 지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요소 방지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일단 주거가 제공되면서 대상자를 안정화시키는 주거기반의 사례관리(Home-Based Case Management)이다. 대상자를 주류 사회서비스와 연결시키는 것,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교육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위기관리를 위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는 주거이전 이후('after the move')의 서비스로 해당 가구를 이전(transition)의 상태에서 안정(stability)의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합하여 주거우선 접근은 네 가지의 주요한 단계로 구성된다.

- ① 1단계 : 위기개입과 단기 안정화(Crisis Intervention & Short-Term Stabilization)
- ② 2단계 : 스크리닝, 접수와 욕구 사정(Screening, Intake and Need Assessment)
- ③ 3단계 : 주거자원의 통합적 제공(Provision of Housing Resources)
- ④ 4단계 : 사례관리의 제공(Provision of Case Management)

주거우선 접근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은 물리적 주거의 제공과 사례관리나 사회서비스들을 연결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보호서비스, 다양한 자원 및 전문 영역과의 연계 등의 활동이 주거복지의 실천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기존 주택정책에서의 프로그램들은 물리적 주택의 제공에만 국한되었고 기존 사회서비스는 주거지원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왔다. 또한 주거지원과 연계된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와 사례관리활동은 몇몇 시범사업이나 민간 주도의 관련 프로그램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일반적 사회서비스와 주거복지의 주거지원서비스

주거복지에서 강조되는 주거지원서비스는 상당 부분 사회복지 영역에서 강조되고 이루어져 온 사회서비스와 유사하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며 재가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 사회서비스와 주거복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동일하지 않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독특한 내용의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거지원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보육이나 가족문제 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되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일반적 사회서비스, 즉, 기존의 사회복지체계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복지의 영역이지 주거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여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역사회생활과 관련되는 서비스를 주거복지 영역에서 주거지원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면 기존 사회복지 영역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누가 혹은 어떤 영역의 서비스 체계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론적 구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Bennett은 다음 <표 1>에서와 같이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별하고 있다. Bennett의 구분에서 주거지원서비스로 명명되고 있는 부분 중 일부는 일반적 사회서비스와 중첩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를 단지 기존의 재가복지나 일반적 사회서비스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활동 중에서 주거생활, 특히 주거의 유지에 직결된 부분은 대개 기존의 사회복지체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공공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잘 인식되지도,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표 1> Bennett의 주거지원서비스와 일반 사회서비스출처 : 서종균(2009)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서비스 내용
주거 서비스	주택이나 기타 시설을 적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	주택개조 장치 및 시설 주택개량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	주택을 생활할 수 있도록 갖추고 유지하기 가사 및 생활기술 개발 재정관리/보조금 신청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 대변, 접근 및 연락 심리적 지지와 상담 사회적 접촉과 활동 만들기 건강과 복지를 위한 수퍼비전과 모니터링 주택의 개량 및 수선 제공에 대한 상담 커뮤니티 알람 제안 청소 및 낮은 수준의 쇼핑
대인 사회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보호와 지원 서비스	대인 케어 일어나기, 잠자리 들기, 목욕 돕기 가게 및 홈케어 식사제공 청소 세탁 쇼핑 집안일
보건 서비스	간호 및 보건	약물 처방, 옷 갈아 입히기 전문적 치료, 재활 및 케어

주거지원서비스와 대인 사회서비스의 영역 모두에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생활유지를 지원하는데 큰 중요성을 나타낸다. 사례관리의 방법이나 기술적 측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진행되어 온 재가복지 등에서의 경험과 기술이 유용할 수 있다. 사실 주거지원 서비스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리 낯설게 느껴지는 내용만은 아니다.

●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체계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사업은 대표적으로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서비스 내용은 센터가 자체로 운영하는 직접지원사업, 기존의 관련 자원이나 프로그램과의 연계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주거실태조사 및 기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지원사업은 주거복지센터의 자체 인력이나 자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욕구에 직접 대응하는 활동이다. 센터의 공통적인 직접지원사업으로 주거상담, 긴급임대료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연계, 특별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이 있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직접지원사업의 형평성 있는 추진을 위해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1순위는 긴급퇴거위기에 처한 가구, 2순위는 퇴거위기 상황은 아니면서 차상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순위는 그 외의 가구가 해당한다.

<표 2>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사업	비고
지역주거실태조사	지역사회 주거상황 실태조사 주거취약계층 욕구조사	
직접지원사업	주거상담 긴급임대료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연계 특별취약계층 지원사업	센터자체자원 활용
연계사업	임대료 지원연계 집수리 지원연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기타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역사회자원발굴 및 활용 사례관리기반실천
지역주거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	지역사회조직활동	
기타사업	임대료 대출 재개발 등 지역 주거복지현안 관련 사업 기타 사업	

주거상담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주거문제나 욕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긴급 또는 간단하게 욕구를 표현하는 상시적 전화상담과 심층적이고 정확한 사정을 위한 방문상담,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사무소나 아파트단지, 길거리 등에서의 현장상담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 수행하고 있다.

긴급 임대료 지원사업은 실직, 와병 등으로 임대료가 연체되어 퇴거위기에 처하거나 일시적으로 임대료 지불능력이 없어진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 후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해당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집수리서비스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연계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고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낮은 점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특별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노숙인·쫓방 거주자, 강제퇴거조치자, 한부모 세대, 장애세대, 성매매 피해여성 등 주거취약성이 두드러지는 특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주거지원사업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반으로 대상별 특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당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해 각 대상의 특정 욕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거박탈 위기에 처한 가구의 보증금, 월세, 주거 관련 비용을 영구지원이 아닌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긴급 주거비 소액대출 지원사업이나, 에너지 재단과 함께 이루어진 난방지원공사 혹은 현물 형태로 연료를 지원하는 긴급연료지원사업 등도 센터별 여건에 맞추어 실행되었다.

직접지원사업 외에도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이 수행되었다. 직접지원사업이 주로 주거지원서비스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면, 연계사업은 대체로 일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다. 주거복지센터 자체의 활동보다도 지역사회 관련된 서비스 체계나 자원의 연계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다. 이 연계활동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수행에 기반하고 있다.

다음으로 쫓방상담소의 활동에 대해 잠시 살펴본다. 쫓방은 우리나라 주거취약계층의 독특한 주거양식 중 하나이다. 쫓방은 도심지의 재개발 열풍 속에서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쫓방에는 아직도 수 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 쫓방과 다른없는 상황이지만 집계되지 않은 곳도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이 쫓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정해도 과언은 아니다. 쫓방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문제의 양상'으로 조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도심 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와 지역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주거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에 대한 주목과 함께 쫓방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당시 쫓방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여기에 일부 활동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쫓방상담소는 쫓방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 기준으로 서울 5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 대구 개소, 부산 2개소 등 총 1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쫓방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고 그 실태와 주민들의 주거 및 복지욕구 역시 행정적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쫓방상담소는 지역에 밀착된 주거운동 관련 경험에서 얻어지는 접근성을 토대로 하여 쫓방밀집지역에서 사례관리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활동이다. 쫓방상담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쫓방과 입주민의 실태는 대략 다음 표와 같다.

<표 3> 2009년 기준 쪽방 현황과 쪽방상담소

기관명	건물(동)	쪽방수	생활자수	주민등록 미등록자	공공부조수 급자
영등포 쪽방상담소	67	541	510	23	349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40	785	640	24	291
용산 쪽방상담소	45	975	791	389	362
종로 쪽방상담소	90	781	668	15	217
동대문 쪽방상담소	58	505	319	78	98
인천 쪽방상담소	256	341	667	0	186
대전 쪽방상담소	375	1,498	900	5	775
대구 쪽방상담소	125	1,370	791	16	415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22	295	283	36	162
부산동구 쪽방상담소	44	520	140	7	104
합계	1,122	7,611	5,709	693	2,959

쪽방 주민 중에는 공공부조 수급자도 많지만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때문에 기존의 공공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례가 많다. 이들에게는 행정적인 일반 접근을 통한 공공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쪽방상담소를 통한 지원서비스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쪽방상담소는 쪽방 밀집지역에서 전형적으로 주거욕구에 기반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위이다. 쪽방상담소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혹은 주거지원사업의 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주거정보제공, 주거안전점검, 긴급지원연계사업 등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입임대주택사업 등과 연계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례관리활동도 부각되고 있다.

<표 4> 쪽방상담소 주거지원·주거복지사업 실행 현황

구분	주거향 상	난방지 원	주거비 지원	이주지 원	주거정 보제공	매입임대 주택운영	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주거안 전점검	쪽방임 대사업	긴급지 원연계	기타
영등포	●	●	●	●	●	●	●	●	●	●	●
남대문	●				●	●	●	●		●	●
용산	●				●			●		●	●
종로	●		●		●	●	●	●		●	●
동대문	●	●		●	●	●	●	●		●	●
인천	●	●			●	●	●	●		●	●
대전	●	●	●	●	●	●	●	●		●	●
대구	●	●		●	●	●	●	●		●	●
부산 진구	●		●	●	●	●	●	●		●	●
부산 동구	●	●		●	●			●		●	●
합계	10	6	4	6	10	8	8	10	1	10	

* 출처 : 장민철, 2009.

* ● 표시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

쪽방상담소가 주거제공 및 주거수준향상사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쪽방 주민에 대한 생활의 질을 고양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관련 활동에 많은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쪽방상담소의 일반사업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행정적 지원, 공공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지원, 취업지원, 생활편의제공과 생계지원 등은 모든 쪽방상담소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조직화사업, 공동체성 증진사업 등 지역사회조직사업도 쪽방 상담소의 활동 내용으로 나타나곤 한다.

<표 5> 쪽방상담소 일반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비고
상담 및 행정지원	- 사례관리, 주민등록재등록, 장애등록지원, 호적취득, 법률정보 제공, 증명사진인화, 민생상담	공통
정서지원	- 도서관 운영, 도서대여, 나들이프로그램, 등산프로그램, 심리프로그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영화상영, 문화공연관람, 명절행사, 송년모임, 체육활동, 생일잔치, AA모임	공통
보건의료지원	- 무료검진 및 진료, 의료기관 연계, 무료진료소 운영, 방문간호 서비스, 한방진료, 병원동행, 안경지원	공통
취업지원	- 구직알선, 구직행정지원, 취업정보제공	공통
생계지원	- 무료급식, 밑반찬지원, 의류지원, 응급구호물품지원, 김장김치 지원, 명절농협상품권지원, 생필품지원	공통
생활지원	- 목욕, 세탁, 이미용서비스, 휴게실 운영, 인터넷코너운영	공통
특화사업	- 주민조직화사업, 합동결혼식, 공동작업장, 마을잔치, 주말농장 운영, 공동체사업, 생활협동조합, 재활용나눔가게 등	지역별

특히 쪽방밀집지역에는 다른 사회서비스 관리기관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리활동의 주체가 쪽방상담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일반 사회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주거욕구 중심의 활동영역에서 사회서비스의 공백지대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따른 양상이라 하겠다.

● 지역사회복지실천과 주거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프로그램 구성은 일반적으로 가족상담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그리고 복지관별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관마다 상당히 유사하게 표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어느 한 복지관의 프로그램 소개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일반적인 지역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구성

영역	프로그램
가족상담사업	상담사업 심리상담센터 운영 가족사례관리 한부모가정지원사업 아동지원사업 청소년지원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성인지원사업 대학생/청년지원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사례관리 급식지원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정서지원사업 경제적지원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지역사회조직사업	자원 및 연구개발사업 기업연계사업 사회교육연계 동아리조직사업 자원봉사·후원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아동문화교육강좌사업 예체능교실 창업지원교실 컴퓨터교실 외국어교실
자활사업	취업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 역량강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기관특화프로그램	

여기에 많은 복지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주거복지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혹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기존 사회복지관 활동의 노하우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재가복지사업과의 차별성도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왜 재가복지가 아니라 주거복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통해 활동을 논의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 차이는 기본적으로 ‘집’에 있다. 주거의 제공을 서비스에 연계하느냐 아니면 주거 자체는 사회복지체계 외부에서 관할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가 하는 점의 차이이다. 그간의 재가복지사업이 주거가 불안해지는 문제, 혹은 지역사회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집이 필요해지는 상황 자체는 서비스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연계된 휴먼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 외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기존에 규정된 대상’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점(서두의 사례가 지역사회복지체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점) 역시 주거복지를 기존의 재가복지 외부에 존재하도록 만들어 왔다.

몇 가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방향을 긴 안목에서 검토해보아야 한다.

“주택과 관련된 이슈는 잠시 후 지나가 버릴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가?”

“주거복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가 감당할 수 없는 고도

의 것인가?”

“주택이라는 자원을 공공이 복지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양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새롭게 창출되는 주택이라는 자원은 어떤 공급체계에 관리가 의뢰될 것인가?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스스로를 먼저 투자하여 경험을 가진 곳인가? 자원의 쟁탈전을 위해 뒤늦게 뛰어드는 곳인가?”

“주택과 연결된 사례관리 체계와 주택을 배제한 사례관리 체계 중 어떤 체계가 수요자들로부터 선호될 것인가?”

<참고문헌>

Anderson, I.(1997), Homelessness and Social Exclusion: The Sotuation of Single Homeless People in Great Britain, In Huth, J, H, & Wright, T.(Eds.). International Critical Perspectives on Homelessness, Praeger.

Beyond Shelter(2009), Housing First : Ending Family Homelessness, in <http://www.beyondshelter.org>.

Lanzerotti, L. etc.(2004), *Housing First for Families*, NAEH.

Morse, G.(1998). A review of Case Management for People Who Are Homeless : Implication for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In Fosburg, L. B. & Dennis, D. L.(Eds.). *Practical Lessons : The 1998 National Symposium on Homelessness Research*, HUD & HHS

남기철(2009),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한국사회정책, 제15집 제2호.

남원석 외(2009), “주거복지센터의 서비스지원실적과 효과”, 2009전국주거복지센터사업보고서.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노숙인보호사업안내.

서종균(2009), “주거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한 검토”, 국토해양부, 서민주거복지포럼보고서.

장민철(2009),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현황과 과제”, 2009 주거복지컨퍼런스자료집.

양천주거복지센터

- 양천구 저소득 주거위기가구 통합 지원사업 -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든든한 주거복지환경
양천주거복지센터는 네트워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1. 양천주거복지센터 소개

1) 개소일

2009년 3월 25일

2) 서비스지역

서울시 양천구·강서구 전역의 빈곤계층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에 양천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성동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총5개가 있으며, 전국으로는 인천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전주주거복지센터, 대구남구주거복지센터, 대구서구주거복지센터, 김해주거복지센터 6개가있어 총 11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주거복지센터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자 교육·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 민·관협력 간담회, 주거복지컨퍼런스,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 주거복지 인식 활동을 위하여 함께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서비스대상

양천·강서 지역 주거취약 저소득 가정(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일반저소득 가정 등)

4) 운영목적

양천주거복지센터는 양천 지역의 주거가 취약한 이웃에게 주거상담 사업, 집수리사업, 임대료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박탈 위기에 처한 이웃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한다.

본 센터는 양천지역의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지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주거관련 서비스의 중복·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지주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각종 지표의 개발, 직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육구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네트워크 형성과 저소득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여 민관이 주관한 주거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목표	프로그램 내용	시기	내용 및 수행방법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거분과	1월~ 12월	1) 일정 : 월1회 2) 목표 : 강서양천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3) 내용 : 사례회의, 집수리, 공동사업 진행, 지역 주거 복지 활성화에 대한 방안 등 연구
	자문 위원회	1월~ 12월	1) 일정 : 연2회 실시 2) 목표 : 주거복지센터 사업 홍보 및 지원 3) 내용 :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강서구 간담회	1월~ 12월	1) 일정 : 연2회 2) 목표 : 센터 홍보 및 주거취약계층 발굴 3) 내용 : 강서구 지역의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주거정책 홍보사업	임대주택 입주 설명회	1월~ 12월	1) 일정 : 연3회×30명 2) 목표 : 양천강서 지역 주민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내 3) 내용 : 임대주택 정보제공과 안내를 통해서 주거상황이동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역량강화	주민권리 교육	1월~ 12월	1) 일정 : 연 3회 실시 2) 목표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 하여 주민역량강화 3) 내용 : 파산강연회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제공
	주거복지 학교	1월~ 12월	1) 일정 : 연2회 2) 목표 :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주거복지에 대한 관 심 확장 3) 내용 : 지역사회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민설명 회	찾아가는 상담실	1월~ 12월	1) 일정 : 연2회 실시 2) 목표 : 주거복지센터 활동사례 및 성과에 대해 홍보, 지역주민들의 욕구파악 3) 내용 : 지역사회에서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상담실 진행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재개발 지역주민 설명회	1월~ 12월	1) 일정 : 연 2회 실시 2) 목표 :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안내 3) 내용 : 재개발지역 주민설명회와 업체 연계등을 통 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찾고, 안정적인 이주를 할 수 있 도록 지원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 상담실시	1월~ 12월	1) 프로그램 일정 : 연 400세대 실시 2) 프로그램 목표 : 지속적 관리로 주민삶의 질 향상 3) 프로그램 내용 : 주거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주거 환경개선	1월~ 12월	1) 일정 : 연 50세대 지원 2) 목표 : 지속적 관리로 주민삶의 질 향상 3) 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서비 스
	긴급 임대료 지원	1월~ 12월	1) 일정 : 연 30세대 지원 2) 목표 : 퇴거 위기가구의 주거안정 3) 내용 : 퇴거 위기가구 긴급 임대료 지원서비스
	소액 보증금 대출	1월~ 12월	1) 일정 : 연 7세대 지원 2) 목표 : 퇴거 위기가구의 주거안정 3) 내용 : 퇴거 위기가구 긴급 보증금 대출

	사회복지 서비스 의뢰	1월~ 12월	1) 일정 : 연 50세대 2) 목표 : 안정적으로 서비스 연계 3) 내용 : 민민, 민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사업평가	사업 보고회	12월	1) 일정 : 연1회 진행 2) 목표 : 주거복지센터 사업 성과 보고 및 홍보 3) 내용 : 1년의 사업 성과 보고회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4월~ 12월	1) 일정 : 연 150세대 지원 2) 목표 : 냉장고,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주거 물품과 단열,창호,바닥 등 공사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 경 마련 3) 내용 :물품, 공사지원 실시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사업 임대주택 운영기관	입주지원	1월~ 12월	1) 일정 : 연 6세대 지원 2) 목표 : 공공임대주택 쪽방.비닐하우스를 통해 안정적 인 주거환경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높임. 3) 내용 :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고시원등에 거주하 는 대상자를 임대주택에 입주 및 지원
	자조모임	1월~ 12월	1) 일정 : 월1회 × 4개월 2) 목표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환경 구축 및 필요 서 비스등 제공하여 자활의 가능성을 높임. 3) 내용 : 반사회,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 진행
홍보사업	소식지 제작	3월~ 11월	1) 일정 : 연 1회 실시 2) 목표 : 지역 사회주민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 해서 알 수 있는 계기 마련 3) 내용 : 지역 주민에 주거복지센터 사업 홍보활동을 위한 소식지를 제작 배포
	홍보 물품 제작	3월~ 12월	1) 일정 : 연 4회 실시 2) 목표 :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센터를 홍 보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 3) 내용 : 사업진행시 지역 주민에게 주거복지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물품제작 배포
	통장회의 참석	1월~ 12월	1) 일정 : 연5회 실시 2) 목표 : 주거복지센터 홍보 및 취약계층 발굴 3) 내용 : 매월 실시되는 지역 내의 통장회의에 참석하 여 센터 및 사업 소개

	홍보활동	1월~12월	1) 일정 : 연2회 실시 2) 목표 : 주거복지센터 및 지역 주거실태 홍보 3) 내용 : 지역내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센터 소개 및 지역의 주거실태 홍보
--	------	--------	---

2. 복지관에서 주거복지사업 활용사례

1) 네트워크 사업

지역사회에서 생소한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자원발굴하는 사업을 네트워크에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거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양천구청,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양천지역자활센터, 양천주거복지센터, SH공사 양천통합관리센터, 대한항공 은빛날개 사회봉사단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세대에 서비스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 사업 진행을 통해 분과의 각 기관들과 결속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2) 역량강화 사업

주거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직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서비스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복지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제공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사업의 대안을 찾았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예로 파산과 신용회복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방법을 찾고, 서류 작성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파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이처럼 복지관에서 개입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제를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파산 및 신용회복강연회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세대에게 파산과 신용회복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며, 실질적인 서류 작성방법, 제출방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가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복지센터 상담 시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강연을 통해서 파산과 신용회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파산이 가능하도록 서류작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많은 곳에서 무료로 파산에 대한 안내를 하므로 강의요청을 잘 한다면, 전문가 파견으로 지속적인 강의진행으로 파산신청 및 면책이 가능하다.

② 주거정책 강연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정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월임대료 보조제도, 집수리제도, 보증금대출제도, 전세금대출 제도 등을 몰라서 신청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정보 제공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직접지원 사업

주택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세대가 매우 많다. 퇴거위기에 놓인 세대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지원을 통해서 퇴거 위기에 놓인 세대에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거관련 정보제공을 통해서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주거를 찾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① 월임대료 지원

매월 임대료를 내고 사는 세대로 임대료가 밀려있거나, 임대료 납부가 어려워 퇴거 위기에 놓인 세대에 최대 60%의 임대료를 5개월 동안 지원한다.

② 소액보증금 대출

주택 입주할 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에 소액보증금 대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택 이동을 도와준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노후주택 개보수, 집수리봉사단 활동 등의 사업으로 노후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세대에 단열공사, 창호공사, 도배 및 장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준다.

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세대에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양천주거복지센터에서 6세대를 입주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4) 재개발 지역 주민설명회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재개발지역에 직접 나가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재개발 지역의 진행속도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후,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재개발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재개발설명회를 통해서 욕구를 해소하는 사업을 하였다.

5) 공공 임대주택 주민설명회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시작 후 한정된 자원으로 일시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을 파악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내 집'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 저소득층은 주거대란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 제도가 많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입주하여 근본적인 주거환경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 심사기준에 대한 전달을 진행하여, 자격을 만들고, 당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직접지원의 한계에서 실질적인 가능성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매우 높으며, 지지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직접지원이 어려운 기관도 실천가능하다.

6) 기타 자원 발굴 및 지원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서울형 집수리, 주거복지재단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주택 사업 등의 주거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과 활용이 가능하다.

3. 양천주거복지센터 활동



양천구 지역 수해피해 복구



임대주택주민설명회



재개발지역주민설명회



파산강연회



재개발 지역 찾아가는상담실



대한항공 은빛날개후원회 연계 활동



양천구 지역복지협의체 주거분과회의



도배 및 장판 교체 주거환경개선사업

〈함께하는 사람들〉

순번	이름	기관	직함	메일주소
1	박종진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gill1004@nate.com
2	오미주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gnsenior@naver.com
3	김진희	강서구립봉제산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nato83@naver.com
4	김미영	구로구수화통역센터	과장	y0908427@nate.com
5	안혜성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간사	love-ahs7@hanmail.net
6	강민희	금천구치매지원센터	사회복지사	12qw22@hanmail.net
7	박지영	금천구치매지원센터	팀장	kate1423@hanmail.net
8	김재성	기아대책 중동제2복지회관	과장	joeunsori99@nate.com
9	김수연	기아대책 중동제2복지회관	사회복지사	peace_out_@hanmail.net
10	양수지	까르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직원	
11	김주영	대길사회복지시설	팀장	kjyheaven@gmail.com
12	김민경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poohpooh85@naver.com
13	장성원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aksellpa@hanmail.net
14	배경진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jtlovekj@hanmail.net
15	이은영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ey1318@nate.com
16	최웅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cug84@hanmail.net
17	김윤미	사회복지시설 새롬마을	생활복지사	lovesong-112@hanmail.net
18	이재근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부장	yeonsoo79@hanmail.net
19	정영규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팀장	bau9153@naver.com
20	박상미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yodesm@hanmail.net
21	김수영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316young@naver.com
22	오경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genie_1114@hanmail.net
23	이경아	성모가정노인복지센터	직원	
24	선우복	성북지역자활센터	사원	jaja1999@hanmail.net
25	임현주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국장	shhw2203@nate.com
26	정재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간사	shhw2203@nate.com
27	위수경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부장	wskyung@nate.com
28	주현정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과장	nenim2@hanmail.net
29	김수진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ychoose@paran.com
30	김매라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rlaao fk1115@naver.com
31	남궁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nkjun1@hanmail.net
32	신유식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팀장	yuddi@hanmail.net
33	김택중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enabler84@hanmail.net
34	윤진희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팀장	zziney@naver.com

35	이은영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eggyoung85@hanmail.net
36	김경식	양천노인종합복지관	팀장	kkstar00@daum.net
37	김형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chickenpark@naver.com
38	서종익	양천지역자활센터	팀장	jise02753@hanmail.net
39	김홍수	양천지역자활센터	팀장	godboykr@naver.com
40	곽수경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pqowiee@daum.net
41	김지선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팀장	js101010@nate.com
42	박소영	임마누엘구로공동체	사회재활교사	64psyoung@hanmail.net
43	임혜민	임마누엘구로공동체	대체교사	hamin0969@hanmail.net
44	이정희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팀장	lee-jjanji@hanmail.net
45	박미향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m_h_castle@nate.com
46	정성경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47	김지영	재가장기요양기관 99천사	대표(사회복지사)	kiy29999@naver.com
48	이선영	중증장애인요양시설예닮	생활재활교사	gozilla@hanmail.net
49	한정희	지역아동센터 서울지원단	지역사회복지사	plusjunhee@hanmail.net
50	최미선	지역아동센터 서울지원단	지역사회복지사	02326@hanmail.net
51	최울미	지역아동센터 서울지원단	지역사회복지사	himmel-welt@daum.net
52	김영옥	지역아동센터 서울지원단	지역사회복지사	wpem21@hanmail.net
53	최승은	지역아동센터 서울지원단	지역사회복지사	seni0417@naver.com
54	백정현	충현복지관	직원	antimion@hanmail.net
55	이석민	파주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fire_min@naver.com
56	권우리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urik85@hanmail.net
57	조양균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n0b0a2@nate.com
58	신민정	하남시청주민생활지원과	직원	swear0802@kg21.net
59	나혜흠	하상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60	임혜일	한빛요양센터	사회복지사	unripe1@naver.com
61	양동훈	호서대학교문화상담대학원	홍보캠페이너	hike@hanmir.com
62	정유리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swyuri@naver.com
63	정진주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starlet13@naver.com

